정책연구보고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2009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수행기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 참여진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의 의뢰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연구하여, 2009년 12월에 제출하는 결과물입니다.

목 차

서문 : 노동자에게 기후변화는 무엇인가 1

1장.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노동 4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4
2. 기후변화에 내재된 적대적 모순: 생산의 바퀴와 기후부정의 6
3. 기후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7

2장. 기후변화협약의 쟁점과 전망 10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5차 당사국회의(COP15)의 위상과 의미 10
2. COP15 주요 의제와 쟁점 12
    1) 전 세계 공유비전(Shared Vision) 12
    2) 선진국 및 개도국 감축목표 13
    3) 유연성 체제 15
    4) 재정·기술 지원 16
    5) REDD와 REDD-plus(REDD+) 18
3. COP15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입장 19

3장. 해외 노동운동의 기후변화 대응 22

1. 노동운동과 환경문제: 개략적인 역사 22
2. 주요 노동조합 조직의 대응 24
    1)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활동 24
    2)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활동 28
3. 주요 산업부문의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 36

1) 에너지 산업 36
2) 건물 효율화 산업 38
3) 교통 산업 40
4. 해외 노조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유형 43
1) 녹색일자리 창출 등 정책 개발 43
2) 사회적 협력과 지역 역량 강화 44
3)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실현 45
4) 작업 현장에서의 녹색 실천 46
5) 교육, 홍보산업 46
6) 국제 수준에서의 활동 47
5. 해외 노동운동의 시사점 49

4장. 기후변화와 한국 사회 51

1.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51
2.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및 산업계의 대응 52
1) 산업계의 기후정책 대응체계 52
2) 주요 쟁점별 산업계의 입장 53
3.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55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56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57
4. 부록: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 비판 58
1) 녹색뉴딜 사업 58
2)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문제점 59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60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61
5) 소결 62

5장. 기후변화와 한국의 노동 64

1.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산업과 고용의 변화 전망 64
1) 기후정책에 의해서 영향받는 산업 부문과 고용 65
2) 한국의 녹색일자리 현황과 잠재력 69

2. 기후변화와 한국의 노동운동 75
1) 환경 문제와 한국의 노동운동 75
2) 민주노총 조합원의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인식 77

6장. 결론 83
1. COP 15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 제안 83
2.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 86
3.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몇가지 세부 과제 88

<참고문헌> 91

<그림 목차>

그림 1. 시나리오별 21세기 지구기온 상승 전망 5
그림 2. Annex I 국가의 감축목표 요구치 15
그림 3. 제조업, 수송분야 종사자수와 CO2 배출량 68
그림 4. 국가별 에너지원단위 비교 72
그림 5. 시나리오별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고용전망 75
그림 6. 기후변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한 동감 정도 79
그림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 노력과 희생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79
그림 8. “기후변화 대처 위해서는 고용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80
그림 9. “전기요금 인상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81
그림 10.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81

<표 목차>

표 1. 완화수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9
표 2. UNFCCC 의장초안의 ’전 세계 공유비전’ 13
표 3. 개도국 적응 비용 추산치 17
표 4. 개도국 감축 비용 추산치 17
표 5. 녹색성장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 62
표 6. 기후정책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야별 고용의 변화 예측 64
표 7. 제조업, 수송분야, 발전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CO2배출량 현황 67
표 8. 환경산업별 종사자 수 71
표 9.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잠재력 73

<상자글 목차>

상자글 1. UNFCCC COP15 협상문서에 대한 ITUC의 입장 21
상자글 2. 미국의 노동계급 환경주의(working-class environmentalism) 23
상자글 3. 선진국 노동자와 개발도상국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27
상자글 4. 블루-그린 캐나다 33

상자글 5.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 37
상자글 6. RMT가 제시한 철도 투자의 효과 42
상자글 7. UNEP와 ILO의 국제적 지원 48
상자글 8. 한국의 노동조합은 '탄소유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86

서문: 노동자에게 기후변화는 무엇인가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가 맞이하게 될 재앙적인 미래에 대한 경고는 이미 신문과 방송에 차고 넘친다. 지구의 기온 상승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며 주로는 CO_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것임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보고서가 밝힌 이래, 이제 세계의 과학자들과 주요 정치 경제 지도자들도 그 타당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토를 달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되는 타협지점은 금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인간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때문이지만, 이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의무감축이든 자율감축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는 것은 이제까지 인간 문명과 경제 발전을 지탱해왔던 에너지 소비와 활동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화석에너지에 힘입어 성장을 구가해온 선진국들이든, 이제 똑같은 방식의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인도 같은 개도국들이든 그러한 변화 요구가 달가울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과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이라는 명제 앞에서 언제까지 국제적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각국 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온난화로 수몰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에게 기후변화협약 총회 현장은 실제로 피 튀기는 전쟁터다. 올해(2009년) 12월에 개최될 코펜하겐 회의는 그러한 안팎의 요구와 역관계 구도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결론이 날 공산이 클 것 같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할까? 더 정확히 말해 한국 정부의 또는 업계의, 또는 노동자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할까?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너무 빨리 해서 경제성장을 해쳐서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한국만 계속 봐달라고 하기도 곤란하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기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는 선진국과 같은 의무감축은 하기 싫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많이 감축하겠으니 예외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포석인 셈이다. 물론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순위가 세계 9위나 되고, 누적배출량으로도 23위를 기록하고 있느니 이런 떼쓰기가 쉽게 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산업계는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갈리기는 하지만, 경제

도 어려운데 추가적 부담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자발적 감축을 하겠으니 규제로 접근은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오히려 복잡한 것은 노동자의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는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피해를 집중시키고, 그 대응이 늦을수록 장기적 부담은 더 커진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경우 경제가 위축되거나 고용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차라리 노동자는 현상유지를 이야기하거나, 협상은 정부와 업계에 맡겨두고 뒷짐지고 있는 게 나은 일일까? 그리고 투쟁력을 보존하여 일자리 지키기에 주력하면 되는 일일까?

세계 온실가스의 3/4 가량이 상품 제조, 에너지 생산과 공급, 교통, 건설 등에서 비롯하는 만큼 작업장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중요한 현장이다. 국제노총(ITUC)의 최근 활동과 입장은 코펜하겐 총회에서 노동자가 구경꾼이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세계와 작업장을 위해 쟁취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ITUC가 대표하는 세계 노동조합운동은 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권고치를 존중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의 변화를 수반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 속에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공동체의 당면 도전에 적극 동참하면서, 기후와 에너지의 위기를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노동친화적인 체제를 만드는 기회로 바꾸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이러한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할 때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진 총연맹과, 기후변화로 인해 큰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산업의 산별연맹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노동을 배제한 채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로만 기후변화를 활용하고 있는 이 때, 노동운동도 새로운 투쟁의 공간인 '기후변화의 정치'의 영역을 노동운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한국의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인 노력으로 당면한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회의의 쟁점과 노동운

동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또한 해외 노동운동진영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 노동운동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어내고자 했다. 이어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각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고용문제와 관련된 상황과 이에 대한 노조원들의 인식도 점검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이에 덧붙여 COP15의 관련 쟁점에 대해서 노동운동진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급히 대응 태세를 갖추며, 또한 바람직한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 12.

연구책임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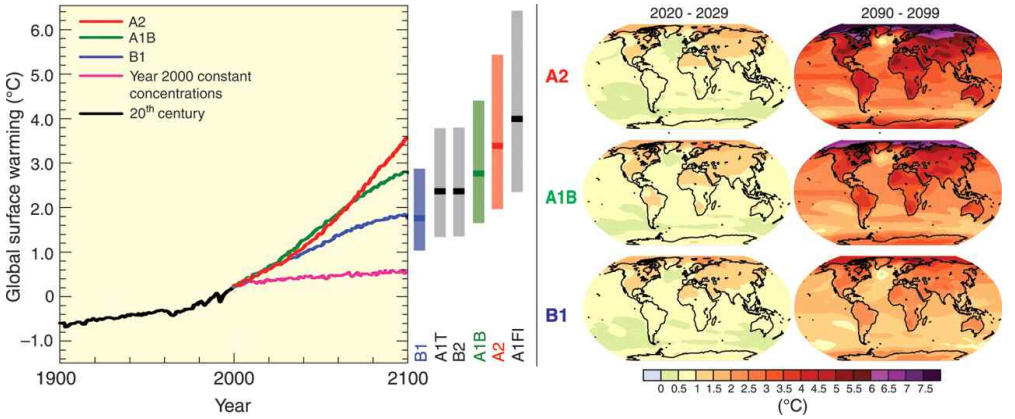
1장.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노동

1.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인류문명과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토마스 프리드먼(2008)은 에너지 수요공급, 석유독재,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 생물다양성 감소,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직면한 인류의 2000년을 에너지기후시대 1년으로 선포한다. 또한 앙드레 고르(2008)는 '생태학적 재편'은 이 체계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150년 전부터 이런 결과를 향해 달려온 경제논리 및 방식들과 급진적으로 결별하지 않는 한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기후는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이고 지구의 표면의 평균온도는 일반적으로 10만년에 5~6도 범위에서 변동해왔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과 이상기후 등을 지칭하는 기후변화는,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기온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100년(1906년~2005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0.74도나 상승했다.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기온이 매년 1.1%씩 상승하여 2100년이 되면 6.4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시간대를 돌아보아도 현재의 기온상승 속도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그림 1> 시나리오별 21세기 지구기온 상승 전망 (IPCC 4차 보고서)



이러한 현상은 1750년대 이래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에너지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와 토지와 삼림 이용 변화로 배출된다. 그리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주로 농축업에서 발생한다.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숲과 해양에 의해 흡수되어 균형상태를 이루나,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림 파괴로 흡수역량을 넘는 만큼 대기 중에 초과 집적돼 온실효과가 발생된다. 200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65%(발전분야 24%, 산업분야 14%, 운수분야 14%, 건물 8%, 기타 5%), 비에너지 관련 분야에서 35%(토지사용 18%, 농업 14%, 쓰레기 3%)가 배출되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80ppm을 넘어섰는데, 산업화이전은 280ppm이었다. 매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ppm씩 증가하고 있으며, UN에서 논의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안정화 목표는 450ppm이다. 그런데 최근 파차우리, 스턴 등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상승하고 있으며, 기후민감도(climate sensitivity;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집적으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가 높다는 점을 들어 예초 목표 450ppm을 350ppm으로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에 '형평성과 환경을 위한 경제학 네트워크'(Economics for Equity and Environment,, 2009) 역시

350ppm으로 목표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1)]

기후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후정책[2)])은 생태계를 비롯하여, 식량, 물 공급, 질병 발생 등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산, 분배, 소비의 경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태계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2도만 올라가도 생물종의 15~40%가 멸종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수송, 전력생산, 농업 등 인간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분야들은 거대한 변환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는 기상재해로 인해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생산·소비 시스템의 변화 과정, 즉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위기에 대처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그린뉴딜' 정책으로 극복하려는 세계적인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기후위기의 적대적 모순들: 생산의 바퀴와 기후부정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지구적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에너지 고갈 위기와 기후변화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독일 사민당 의원이자 유럽재생에너지협회 의장인 헤르만 셰어(2006)는 세계 기후 위기, 자원고갈 위기와 에너지 의존성,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핵위기, 수자원 위기, 농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와 같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들의 중심에 에너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

1) 그런데 온실가스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경우 오랫동안 대기중에 잔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배출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응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의 속도와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완화정책)이다.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둘을 통칭하여 '기후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자본과 자연의 모순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적인 거대한 '생산의 바퀴(the treadmill of production)'(Gould et al., 2008)가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이윤 축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낸다. 자본주의(역사적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였다)는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변화·발전하는 작동원리를 갖는 체제이다. 현재 에너지체제의 지속불가능성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채굴과정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환경파괴(이와 병행되는 인권침해)와 파멸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생태학적 부작용들이 발생하며, 제한된 화석 에너지와 광물 자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이미 '석유정점(peak oil)'에 대한 논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영국이 석탄동력에 의존해서 일으킨 초기 산업혁명으로부터 미국이 석유동력으로 패권을 장악하여 '석유중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석유문화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분야의 자본 우위는 시작되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핵 그리고 광물자원의 생산과 소비의 시장은 각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세례를 받으면서 자본의 생태적 놀이터로 기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은 사회·경제 인프라에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거대기업의 특권과 이와 병행하여 일어나고 있는 공공영역의 자유화 흐름 속에 소비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는 북반구와 남반구, 부자와 빈자의 문제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반구의 선진국들은 산업화 이후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경제적 번영을 구가는 '대기 독점(atmosphere monopoly)'의 효과를 누렸다. 반면에 그 결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다. 이런 북반국의 남반구에 대해서 지고 있는 '기후 부채(climate debt)' 등 '생태 부채(ecological debt)'의 해결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문제라고 한다.

3. 기후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은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은 기후위기와 석유정점의 상황에 맞이하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태풍과 집중호우, 무더위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사건들은 산업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를 위축시키고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3)]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연구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이 과학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정책도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는 고용에 영향을 주는 원인적 요인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은 너무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를 통해서, 정략적인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는 고용의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3) 유럽노총이(2007)이 진행한 EU 25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전, 석유, 교통, 철강, 시멘트, 건설산업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이 미치는 고용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 기업, 학계 어디서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표 1> 완화수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Sustainlabour·UNEP, 2008)

분야	완화수단	고용 영향	비고
에너지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재생가능한 열과 전력 생산 확대 -산업과 상업시설의 에너지 진단 확대	-, + + +	-석탄산업의 고용감소와 가스산업의 고용증가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용 증가와 화석연료/전력산업의 고용감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여전히 불확실함
건물	-에너지효율적인 조명 촉진 -에너지효율적인 시설 사용 촉진 -단열 개선	+ + +	-건물혁신은 노동집약적인 직접고용. 일자리 질은 낮기 때문에 교육과 자격이 중요함
운송	-도로교통에서 철도, 개인차량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바이오연료 개발 확대 -개인 교통수단 축소	-, + + -, +	-도로교통의 노동자들의 철도나 대중교통으로 전환 -바이오연료는 노동집약적이나 노동조건과 환경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2세대 연료의 노동친화적 개발은 빈곤지역의 일자리 창출효과 -청정 자동차 산업의로의 전환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옴
산업	-에너지효율성 수단 실행 -원료 재활용과 대체 -비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통제 -특수공정 기술 개발	-, +	-아웃소싱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은 기후보호정책에 영향받음. 그러나 연구·개발과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은 부정적 영향을 피함

우선 또한 화석연료와 관련되거나 에너지집약적인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석탄산업이나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산업, 석유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탄소세 등의 도입에 의한 석유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정책이 고용에 꼭 부정적인 효과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완화수단으로 도입되는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건물의 개보수, 대중교통과 철도의 확대 등은 이 분야에서 산업에서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2 참조)[4].

4) 기후정책에 의해서 영향받게 될 우리나라 산업의 일자리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논이는 이 보고서의 5장 1절을 참고할 수 있다.

2장. 기후변화협약의 쟁점과 전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UNFCCC, 1992년)과 교토 의정서(Koyto Protocol, 2005년 발효)라는 국제 협약이 체결되어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EU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체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참이다. 즉, 올해(2009년) 12월에 개최 예정인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제 15차 총회(COP15)에서 새로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제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에서 코펜하겐 제15차 당사국회의(COP15) 위상과 의미, 준비과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중요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OP15의 협상 성공 여부와 결과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궁극적으로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COP15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국제노총(ITUC)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COP15 협상이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가늠해보도록 하겠다.

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회의 위상과 의미[5)]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라고 한다. 당사국 총회는 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2009년까지 14차례 COP는 지구의 환경과 각국의 경제를

5) 이하 COP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에너진포커스>(이진우(2009a, 2009b))를 요약한 것이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이하 'COP 3')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어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2001년 COP6.5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의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어 시장경제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방법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 COP13의 '발리행동계획'은 21세기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Post-2012 체제의 논의 시한을 COP15(2009)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재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가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COP15에서는 2012년 이후의 각국 온실가스 대응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합의해야 한다. 1997년 COP3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의 각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 Post-2012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과 각국의 의무가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각국의 감축의무가 정해지면 세부 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토의정서 체제와 Post-2012체제가 시간적 공백이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올해 당사국총회가 마지노선이라는 공감대가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COP 15는 Post-2012 체제의 시발점이자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OP15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Post-2012 체제가 교토의정서 체제와 같이 5년이라는 단기간의 규정이 아니고 2050년까지의 장기 규정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지표를 갖기 위해서는 장기 목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거기에 기후변화협상이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협상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원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Post-2012체제는 2050년까지의 "전세계 공유비전(Shared Vision)" 논의와 함께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국가의 반발로 인해 중기목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적어도 2050년까지의 공유비전 논의에는 이견이 없어 COP15는 2050년까지의 지구적 노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15가 단순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협약의 의미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화석연료 소비

에서 비롯되므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각 분야의 영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함께 기존 화석연료 사업을 안정적으로 쇠퇴시켜야 하는 등의 경제적 대격변이 올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데,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에 피해가 집중됨으로 인해 국제적 부정의(injustice)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COP15는 현 사회의 제도가 야기한 국제 부정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제 권력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 COP15 주요 의제와 쟁점

1) 전 세계 공유비전(Shared Vision)

그 간 전 세계 공유비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던 의제 중 하나이다. 게다가 COP15 의장국인 덴마크에서 감축목표 확정 카드를 일괄타결 카드와 교환하는 외교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불투명한 타결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공유비전 도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50년'이라는 기준년도와 현재의 시간적 간격이 4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동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체 협상 타결을 전제로 했던 발리행동계획의 합의가 무너질 경우 일부 국가의 반발로 인해 전세계 공유비전의 합의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할 경우, 각국이 갖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수치가 누락된 수준에서 전세계 공유비전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의장초안에서는 전세계 공유비전 관련해 많은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IPCC의 4차 보고서(2007)에 근거한, 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한다는 제1안이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그러

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기후안정화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대기 중의 온실가스 평균 농도가 350ppm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보다 급진적인 안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세계야생생물기금(WWF), Greenpeace 등이 UNFCC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전세계가 1990년 배출량 수준으로 복귀, 2050년까지 전 세계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는 안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표 2> UNFCCC 의장초안의 '전 세계 공유비전'

	내 용
1안	- 대기 중 CO2 농도 400~450ppm으로 안정화 -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 -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
2안	- 대기 중 CO2 농도 350ppm 이하로 안정화 -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 -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1~71%(혹은 85% 이상) 감축

2) 선진국 및 개도국 감축목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한 논쟁은 결국 선진국이 얼마나 많은 감축목표를 공약하고, 개도국에게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각각의 의제가 이미 입장차가 크게 드러난 의제들인데다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마저 여의치 않아, 1차적으로는 협상 트랙의 일원화 혹은 이원화 문제가 핵심 갈등 사안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 당사국의 감축을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일원화된 협상트랙을 요구 중이고, 개도국은 감축의무가 선진국에만 구속되어 있는 현재의 이중트랙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회기 초반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의 협상논의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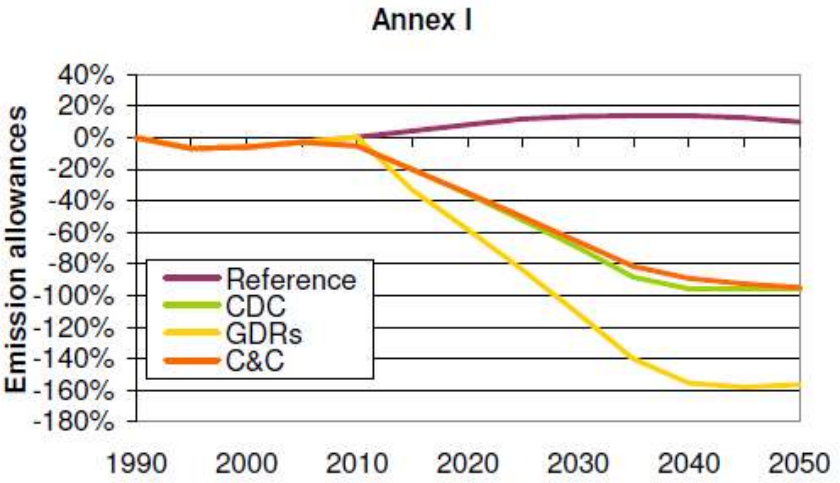
'선진국 추가감축공약 특별작업반(AWG-KP)'에서는 선진국의 추가감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지만, 선진국들이 일원화된 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AWG-LCA 회의에 종속적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감축목표나 재정지원 등에서 큰 폭으로 양보하거나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대치에 상응하는 감축공약을 내지 않는 한 AWG-KP 회의에서 선진국들의 추가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전히 개도국들과 NGO들은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에 걸맞게 추가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회의 진전 상황과는 별도로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본 회의에서 제출된 UNFCCC 의장초안에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5%(이상)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75~85% (혹은 95% 이상)감축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NGO는 UNFCCC 의장초안보다 더욱 강한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Greenpeace 등은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40%,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95%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WF는 더 나아가 선진국이 GDR(온실가스 배출권리)[6] 기준에 의거해 감축할 경우 2020년까지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온실가스 배출권(Greenhouse Development Rights; GDR)이란 저개발된 국가들의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경제규모에 따라서 적정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인구수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선진국의 사람이든 후진국의 사람들이든 개인당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되어 한다는 평등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정의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산업화된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배출해온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제1세계가 져야 한다는 비판도 담고 있다.

<그림2> Annex I 국가의 감축목표 요구치(WWF, 2009)



3) 유연성 체제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유연성 체제는 NGO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효과적인 감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었다. '유연성 체제'(flexible mechanism)라는 이름으로 총칭되는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는 시장메커니즘에 의거해 온실가스 거래를 가능케 한 제도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EU의 절대적인 지지 하에 엄청나게 덩치를 키워왔는데, 2020년경에는 거래량이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은 접근성의 제한·배출권의 검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각국 협상대표단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해 유연성 체제 개선을 주요 협상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개도국들은 AWG-KP 회의가 선진국의 추가감축 목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WG-KP에서 유연성 체제 논의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연성 체제의 실행과정 개선 문제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지속적으로 협상중이다. 현재 유연성 체제의 주요 쟁점은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에

의거한 부문별 CDM과 EU가 제안한 부문별 배출권 부여(sectoral crediting)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한국 등이 제안하여 국내외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개도국감축행동등록부(NAMAs)가 실행될 경우에 발생하는 일명 NAMAs credits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 역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결국 유연성체제 논의의 핵심은 프로젝트 기반의 메커니즘 개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일부 국가가 작년에 제안한 핵발전의 CDM 인정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CDM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괄타결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CCS의 경우 CDM 방법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NGO의 경우 거의 모든 NGO가 시장에 의존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없고, 오히려 자본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큰 폐해를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의 NGO 뿐만 아니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 NGO들 모두 COP15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CDM을 포함한 유연성 체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배출권거래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선진국 NGO와 개도국 NGO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4) 재정・기술 지원

재정・기술 지원 의제의 핵심은 선진국의 지원 규모다. 선진국이 공약한 적응지원기금이나 기술지원의 규모와 개도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편차가 커서 쉽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정・기술지원 문제는 개도국의 감축목표 설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개도국 지원 의제가 합의되지 못하면 개도국의 감축 참여와 선진국의 감축목표 설정 문제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우 민감한 의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50년까지 750~1000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tm 감축비용 역시 연간 최대

6,7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공약하고 있는 금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재원의 규모와 함께 재원 조달방식, 활용에 관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기술지원의 경우 여전히 지적재산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표3> 개도국 적응 비용 추산치(정지원 외, 2009 재인용)

(단위: 십억 달러)

	동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앙아시아	남미 카리브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최대	28.7	10.5	22.5	4.1	17.1	18.9	101.8
최소	19.5	5.2	16.8	2.9	15.5	16.9	76.8

자료: World Bank(2009), *The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Adpating to Climate Change*에서 저자 편집.

<표4> 개도국 감축 비용 추산치(정지원 외, 2009 재인용)

(단위: 십억 달러)

추정 기관	CO_2 안정 목표	2010~20년	2030~40년
UNFCCC	550 ppm		82~87
IIASA	450 ppm	28~93	137~240
IEA	550 ppm	230	
	450 ppm	600	
McKinsey	450 ppm	60	675
MiniCAM	450 ppm		168

자료: World Bank(2009), *World Development Report 2010*.

5) REDD와 REDD-plus(REDD+)

REDD(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의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는 삼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20%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화석연료 사용 감축만큼이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REDD는 COP15에서 결정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

이전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의 정부 대표단들은 REDD에 대해 그 중요성과 보상차원의 지원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REDD가 실질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REDD가 지역 토착민들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가간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기후정의'의 차원이었다.

REDD-plus는 기존 REDD에 조림사업을 배출권으로 포함시키도록 내용을 발전시킨 방안이다. REDD-plus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며 기본합의는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의장초안을 개정한 개정협상문에 게재된 6개항에 관한 세부조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물론 REDD-plus가 구축될 경우 생겨나는 탄소배출권의 양이 매우 많으므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갈등의 요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GO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REDD-plus 역시 토착민 등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기후 부정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제3세계 NGO가 중심이 된 CJN(Climate Justice Now) 그룹이 크게 반대하고 있고, 금번 회의에서 REDD-plus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의제화 할 계획이다.

3. COP15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입장

국제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기후변화협상에 개입하고 있는 국제노총(ITUC)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COP에 맞춰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IPCC 4차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ITUC · ETUC · TUAC, 2006; ITUC · ETUC · TUAC, 2007; ITUC, 2008, ITUCb, 2009).

특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ITUC는 지구 기온 상승은 2℃ 이내로 묶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IPCC가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5%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의 중간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적어도 1990년 대비 25-40%의 감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지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재생에너지원 확대 등과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의무적인 감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특수한 상황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교토의정서 체제의 그룹 1(Annex 1)의 국가 전체의 총 배출량 감축이 IPCC가 제안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지원에 대해서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가 등도 재생에너지 목표, 에너지효율화, 청정석탄기술과 벌목금지 등의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ITUCb, 2009).

한편 코펜하겐 COP15 협상문서 초안에 대한 국제노총의 입장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볼 수 있다.[7] 우선 국제노총은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해당사자'로

7) 국제노총은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포스토 교토 의정서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TF를 통해서 올해(2009) 6월에 발표된 의정서 협상 문안에 노조의 관심사를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에 몇몇 조항/문구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어 국제노총은 자신들의 수정안을 각국 정부가 지지해줄 것과 이것이 가능하도록 각국 노동조합이 자신의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8]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 및 기후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빈곤 축소, 고용 보장, 사회적 안전망 등의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으로서 국제노총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기후변화협상에 개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NGO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도 그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CAN, 2009).

또한 적응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노동자를 특별히 고려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인프라와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투자, 협상 당사국들이 기후정책에서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화 부문에서는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구하는 한편, 녹색이면서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기적 산업정책과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녹색경제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과 협력의 필요성도 협약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협상문서 조항/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 상자글 참조).

한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특별한 관심 사항이 이외에도, '기후정의'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REDD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RED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특히 생물다양성과 같은 사회적이고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REDD의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전환' 논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3장 2절의 캐나다 노총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상자글 1 : UNFCCC COP15 협상문서에 대한 ITUC의 입장

<총론>

1. 현행 협상문서에 담겨진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of the workforce)"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지지해달라.
2. 의제 21의 주요 그룹 혹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구성체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해당사자" 혹은 "시민사회"의 정의를 추가해달라(이 속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포함)

<적응>

3.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한 인구집단으로서 불안정 노동자를 언급해달라.
4. 적응 전략의 하나로서 공공 인프라와 괜찮은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지지해달라.
5. 노동의 기본원리와 권리에 대한 ILO 선언(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포함시켜 달라.

<완화>

6. 저탄소 전략을 실행할 경우에, 장기적 산업정책과 모든 이를 위한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를 포함시켜 달라.
7.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촉진해달라.
8. 완화 수단이 취약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달라.

<기술과 역량강화>

9. 기술 습득, 에너지 서비스와 적응 활동에 대해서 다룰 때, 노동자 교육과 직업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지지해달라.

<재정>

10. 개발도상국의 완화 및 적응 행동을 위한 공적인 기금을 제공하는데 선진국들이 헌신해달라.

3장. 해외 노동운동의 기후변화 대응

1. 노동운동과 환경문제: 개략적인 역사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960년대부터 해외 노동운동은 환경운동과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19세기부터 발전해온 노동운동 및 그에 연계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환경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신사회운동의 일부로서 환경운동이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갈등적·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 특히 환경문제를 이유로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환경운동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우려하는 노동운동의 관계는 '일자리 대 환경'의 대립적인 관계로 자주 묘사되곤 했다. 이념적으로도 환경운동은 노동운동을 '산업주의'를 구성·지지하는 주요한 세력으로 이해했으며, 노동운동은 환경운동을 탈계급적인 중산층의 운동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항상 갈등적·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운동이 태동하던 1960년대부터 노동운동은 환경운동의 강력한 지원자가 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정대기법>과 <청정수질법> 같은 법률이나 환경보호청(EPA)의 설립을 위한 환경운동의 캠페인에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미국 노동운동의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는 '노동계급 환경주의(working-class environmentalism)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아래 상자 글 참조). 또한 환경단체들은 노동자들의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산업보건법>과 관련 기구의 설치를 위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한재각, 2008a). 또한 1970년대 초, 호주 노동자들은 자연환경 및 역사적 유적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해당 작업장을 봉쇄하여 개발업자를 굴복시키는 캠페인을 펼쳤다(녹색 금지/Green Ban 캠페인). 이런 전통은 1980년대 호주 철도, 부두하역 노동자 등

이 참여하여 우라늄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되살아나기도 했다(한재각, 200b)

특히 '일자리 대 환경'이라는 대립적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은 '녹색일자리'라는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기고 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부각되자, 환경문제와 고용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전략을 개발하였다. 예컨대 1975년에 설립된 <완전고용을 위한 환경주의자들(Environmentalist for Full Employment : EFFE)>은 현재 대표적인 녹색일자리로 받아들여지는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Gordon, 2004). 한편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이로에서 개최된 세계환경정상회담(WSSD)을 전후로 하여, 호주와 덴마크에서는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이 연대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노력에 나섰다. 이는 당시 집권하고 있던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지원을 얻으면서 구체적인 사업 수행단계에까지 나갈 수 있었다(Penney, 2002).

또한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중·후반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북미의 노동조합은 환경문제와 기후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개발하여 발전시켰다. 또한 미국에서는 AFL-CIO와 시에라클럽과 같은 대표적인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공식적인 연대관계가 발전되었으며, 1999년 시에틀에서 벌어진 반세계화 시위에서 그 위력을 선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2000년에 들어와서는 전지구적인 환경회담과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노동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국제노총(ITUC)는 2007년부터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한편 각국의 노동조합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자글 2. 미국의 노동계급 환경주의(working-class environmentalism)

노동계급 환경주의는 노동자와 노동계급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오염, 환경적 정화(environmental cleanup), 계급 불평등 그리고 천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장기적 보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환경윤리(environmental

ethic)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노동계급 환경주의는 도시 오염, 독성 폐기물, 깨끗한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멸종위기종의 보전, 습지 유지, 국립공원의 확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덜 강조한다는 점이나, 오염을 정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주류 환경주의"와 구별된다. 많은 주류 환경주의자와 다르게, 노동계급 환경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에 대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한다.

한 연구자(Gordon, 2004)에 의하면, 미국에서 노동계급 환경주의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전쟁이후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고독성의 화학산업 등이 번성하면서 환경과 작업 조건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작업장과 환경의 오염과 그에 따른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한 일반 노동자들의 우려와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계급의 환경주의는 이와 같이 작업장과 환경의 오염과 그에 따른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노동자의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작업장과 환경의 오염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와 환경주의자들 사이의 연계가 늘어났고, 이들은 대기업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오염의 뿌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앞서 살펴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이러한 인식적/이데올로기적 기반(노동계급 환경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주요 노동조합 조직의 대응

1)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국제노총(ITUC)의 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동조합의 정책이 정식화된 것은 2006년의 일로 보인다. 국제노총은 유럽노총 그리고 OECD노조자문위원회는 2006년 나이로

비에서 개최된 COP12회의에 맞춰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의 COP13과 COP14 회의에서도 성명서를 계속 발표하였고, 올해(2009년) 개최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COP15 회의에 맞춰서 성명서를 이미 발표했다.[9] 국제노총의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이는 2007년 6월과 12월에 개최된 국제노총 총평의회(ITUC General Council)가 기후변화를 핵심적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결과에 힘입었다(ITUC, 2009a). 총평의회는 "모든 ITUC 회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며, 효과적인 친환경 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Post-2012 국제협약의 채택에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촉구"하였다(비반코 무가라, 2008).

2006년도에 발표된 국제노총의 성명서는 기후변화의 국제협상에 대한 국제노총 입장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정책과 조치들이 미치는 고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참여는 생산과 소비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다. 셋째,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처이자 폐기물의 발생하는 장소로서의 작업장에 기후변화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깨끗한 작업장을 만들려는 목표는 산업별/전국적으로 탄소와 폐기물을 감소시키려는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넷째, 지속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에너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공적 투자가 장려되어야 한다(ITUC · ETUC · TUAC, 2006).

한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COP13 회의에 맞춰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책임부담에 대한 입장을 정식화하였으며, 덧붙여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도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세계 공유비전과 관련해서는 IPCC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를 지지하면서, 온도상승을 2℃에서 묶으며 이를 위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5%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선진국은 가까운 시기에 상당한 수

9) 이중에, 2008년에 발표한 성명서의 국문 번역문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준의 CO2 배출을 감축해야 하며(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을 예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이용 목표, 탄소포집, 산림전용 방지,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예방, 감축, 안정화 혹은 통제된 증가 조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ITUC · ETUC · TUAC, 2007).

또한 산업별로 감축목표 설정의 상이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에 포함된 산업 분야(주로 발전, 철강 등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 분야를 구분하고 있다. 앞의 산업 분야는 생산량(tonne of product)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취하는 반면에 뒤의 산업 분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평등성의 기준과 함께, 각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원과 경제 · 사회적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ITUC · ETUC · TUAC, 2007).

이는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을 가진 국가(주로 선진국과 신흥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산업 침체 및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라서 고용이 축소될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는 COP14 회의에 대한 성명서에서 '탄소유출(Carbon leakage)'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경 조정 메카니즘(board adjustment mechanism)과 전 지구적인 부문별 협약(global sectoral agreement)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ITUC, 2008)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노총의 발리 성명서(2007년)는 본격적으로 고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Post-2012 협약은 기후변화와 그것에 대비하고 위한 정책에 의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①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고용의 영향, ②적응대책의 실행에 의해서 영향받는 고용의 영향, ③완화대책의 실행에 의해서 영향받는 고용의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영향이 연구되어야 하며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고용과 임금 보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같은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강조하며(정의로운 전환), 또한 녹색이면서도 좋은 일자리의 창출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총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ITUC · ETUC · TUAC, 2007, pp. 3-5).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과 경기를 위축시켜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이지만, 에

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와 같은 산업분야는 확대되어서 고용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라는 인식을 확립했다.

올해 발표된 국제노총의 성명서(ITUC, 2009b)도 이전에 나왔던 성명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성명서도 2008년에 나왔던 성명서와 같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투쟁에서의 평등,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노총은 지금은 "기후변화를 다루어야 할 시간"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시급히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고통과 비용을 "국가 사이에 그리고 국가 내부에서 공정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적·국가적·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후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하며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후변화의 사회적 차원과 작업장 수준의 접근을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다(ITUC, 2009b).

상자글 3. 선진국 노동자와 개발도상국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 탄소유출, 국경 조정 메카니즘, 그리고 전지구적 산업별 협약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의 기업이 자신의 생산시설을 규제를 피해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으로 '탄소유출(carbon leakage)'이라고 부르고 있다. 탄소유출이 일어날 경우에, 두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하나는 해당 국가에서 실업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할 수도 있다(온실가스 배출이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국제적인 상품수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노동조합들은 국경 조정 메카니즘과 전지구적 산업별 협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ITUC, 2008). 국경 조정 메카니즘은 일종의 '탄소 관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온실가스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 내의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없는 국가의 산업과의 경쟁에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용이 축소될 가능

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전지구적 산업별 협약은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동일 산업이 선진국의 산업에 부여되는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연동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탄소유출에 대한 선진국 노조들의 우려는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국경 조정 메카니즘과 지구적 산업별 협약과 같은 조치들은 자신들의 산업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노조 사이의 연대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도 탄소유출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대정부 협박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고 있다.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업계 대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총량규제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기업 및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공장 이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병욱, 2009).

2)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활동

(1) 미국 노동총연맹(AFL-CIO)의 노동-환경 동맹

기후변화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연대의 역사는 1997년으로까지 거슬러 간다. 이 시기에 미국의 전미노동총동맹(AFL-CIO)와 시에라 클럽에 의해서 조직된 환경운동 그룹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 대화체(Labor-Envionmental Dialogue)'를 구성했다. 이 회의는 1999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60여명이 넘는 노조 및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AFL-CIO의 대표(John Sweeney)와 시에라 클럽 대표(Carl Pope)는 "에너지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친화적인 국내 탄소 배출 감축 수단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노동친화적인 기후변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 세

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협에 있어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도록 압력 행사 및 에너지 절약, △장기간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에너지 집약적 산업 및 화석연료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노조의 일자리 보전 및 노동 운동의 강화의 중요성 인식, △전환 프로그램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및 공동체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 △전환의 비용과 부담을 전 계급에서 진보적으로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2004년에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미국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America's Future)'의 주도로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여 아폴로 동맹(Apollo Alliance)가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 AFL-CIO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였다. 아폴로 동맹은 제조업 회생, 공공 인프라 재건설, 외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환경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3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이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840억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전력의 15%, 2020년까지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줄여나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Apollo Alliance, 2004). 또한 2008년에는 2004년 계획보다 더욱 야심찬 내용을 담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청정에너지와 좋은 일자리: 미국 번영을 위한 경제적 전략>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녹색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전략으로, 향후 10년간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 이상의 양질의 그린칼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pollo Alliance, 2008).

한편 2006년에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와 시에라클럽에 의해서 출범한 블루-그린 동맹(Blue-Green Allianc: BGA)은 환경단체의 기후변화-에너지 이슈와 노동조합의 노동법 개혁 이슈를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상적인 연대활동을 보여주고 있다.[10] 6백만명 이상의 노동조합원과 환경단체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동맹은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그리고 녹색경제를 추구하며, 전국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

10) 이 동맹에는 현재 미국통신노조(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천연자원방위회의(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서비스노조(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북미국제노조(Laborers' International Union of North America), 미국전력노조(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미국교사노조(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가 참여하고 있다.

례가 노조들이 환경단체들과 함께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를 지지하기 위해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노조원들을 동원한 사례이다. 또한 반대로 블루-그린 동맹에 참여하고 있던, 전국에서 가장 커다란 환경단체들은 노조와 함께 고용선택자유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의 통과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였다((Bob Baugh, 2009, p.32-33).

한편 AFL-CIO는 2008년 5월 4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AFL-CIO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와 고용 창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AFL-CIO의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간략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AFL-CIO는 "과학적 증거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기후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무제한적인 증가는 긴급한 경제적, 환경적 이슈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AFL-CIO, 2008)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입법 활동에서 다음의 사항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용가능한 기술과 관련한 기준과 시간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투자 포트폴리오도 미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내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려되고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의 해결책에 동참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가격 통제 체계가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환과 훈련 및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자원이 노동자와 공동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에너지 가격으로 영향 받는 저소득 계층의 가족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주정부의 기후변화 수단은 연방정부의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에 적절히 통합하여, 환경적 목표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낙오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AFL-CIO의 입장은 국내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가 보여주고 있으며, 핵발전, 탄소포집저장 기술 등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메카니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캐나다노총(CLC)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녹색일자리 정책 개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이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위기를 해

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사회적 안정망 등을 지원하며 해당 지역공동체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찌(Tony Mazzochi)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발전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진 캐나다 노조의 역할이었다. 아래에서는 캐나다노총(CLC)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그리고 이와 긴밀히 연관된 녹색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11]

CLC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낳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경제 변화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임금 삭감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충분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방 정부가 기후정책과 관련 예산을 수립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를 설치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금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정의로운 전환 기구(Just Transition Board)'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들과 기후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통합시켜야 한다.

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CLC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종의 배출량 총량 설정 및 거래제(Cap & Trade)와 유사한 국가 배출량 총량 설정 및 경매에 의한 탄소가격화 시스템(national Cap and Auction Carbon-Pricing System: C&A)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입에 기반하여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CLC는 C&A에 의해서 얻

11)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개략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한재각, 2009, 37-38쪽 참조할 것. 한편 CLC는 1956년에 Trades and Labour Congress of Canada와 Canadian Congress of Labour의 두 노동조합이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300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캐나다 최대의 노조이다. CLC는 1991년에 '환경에 관한 정책문서(CLC Policy paper on Statement on Environment)에 채택하였으며, 1993년에는 6개의 상설위원회 중에 하나로 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환경단체와 협력하면서 환경의제와 노동의제를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CLC는 1999년에 '환경변화 동안에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Policy on Just Transition For Workers During Environmental Change)'라는 문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녹색일자리 창출 프로젝트(Green Jobs Creation Project)'을 추진하기 위한 배경 문서(Background Paper)를 채택하였고, 한편 2008년 5월 25차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와 녹색일자리: 노동자의 도전과 기회(Climate Change and Green Jobs : Labou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정책문서 채택하였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 문서들에 기초한 것이다.

어지는 수입은 산업개편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평하게 부여되는 탄소세의 경우에도, 그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입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LC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의 개발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우선 2003년의 배경문서를 통해서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 문서 따르면, 녹색일자리의 개념은 ①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는 일자리, ②오염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자리, ③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일자리, ④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일자리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녹색일자리의 '녹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일자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가능한 공동체/경제에 적합한가? ②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와 에너지가 지속가능한가? ③ 작업에 의해서 야기되는 폐기물과 부산물은 어떤가? ④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며, 이것이 노동자와 공동체의 존엄과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CLC는 녹색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정책(Green Industrial Policy)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산업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규제와 재정적 수단 등을 통해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resource),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투입물의 양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노동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공정을 변화시키며, 생산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독성이 덜하고 더 오래 사용가능하며(재이용 및 재활용 포함),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CLC, 2003).

2008년에 채택한 '기후변화와 녹색일자리' 문서에서 CLC는 '녹색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 창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CLC는 연방정부가 10년 동안에 300억 캐나다 달러를 기후변화 조정(Climate Change adjustment)—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에 투자한다면, 33만개의 일자리 창출, GDP에서 1400억 달러의 추가, 증가한 세수를 통해 10년간 300억 달러의 공적투자 회수, 개인 소득에서 950억 달러의 추가 그리고 280억 달러의 에너지 요금 절약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생산물을 정부가 조달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① 에너지 효율의 향상,

② 철도와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③ 보다 나은 연료 효율 기준, ④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분야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투자는 숙련 훈련과 직업 개발과 병행되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계약업체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녹색일자리에 고유한 숙련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녹색산업과 작업장이 적절히 훈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하고 고립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빈곤을 벗어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가진 녹색일자리와 연결시켜주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는 그들의 경제적 필요에 기반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숙련 훈련과 일자리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CLC는 공적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공동체 이익 협약(Community benefit agreements), 녹색 기준, 노동자 기준, 노동조합원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받아들여, 공동체에 돌아오는 이익이 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CLC, 2008).

상자글 4. 블루-그린 캐나다

캐나다의 'Blue Green Canada(Alliance)'는 캐나다에 위치한 철강노조와 환경단체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연대기구로서,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대응 및 의견 제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조 활동들을 벌이고 있어 모범적인 노조-환경단체간 연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에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기후변화법률에 관한 공동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크게 6가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축(선진국)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20년과 2050년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배출총량 규제 방식이 필요하며, 배출집약도 개선이 아닌 절대감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재생가능에너지나 에너지효율화, 스마트 그리드 등에 투자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네 번째, 기후변화대응이 약한 국가의 상품에 대한 조치(관세를 의미)를 취하고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며, 다섯째, 배출권 거래제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내 취약계층이나 기후변화취약국가에 지원해

야 한다(Blue Green Canada, 2009).

(3) 영국 TUC의 작업현장에서의 실천 프로그램

영국노총(TUC)은 환경단체 및 진보적 연구 집단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사업을 수년 전부터 활발히 펼쳐왔고, 특히 작업장 수준의 녹색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TUC가 펴낸 "노동조합이 지구를 지킬 것인가?(Can unions save the planet?)"라는 제목의 2007년 2월 작업장 실태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TUC, 2007a). TUC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 문제 중 어떤 부문은 노조 대표자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영국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전기의 경우 80%)이 작업장에서 직접 사용되고 있으며, 출퇴근 수단 역시 심각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작업장은 탄소 배출에 관한 주요한 조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관련한 TUC의 활동 역사는 짧지 않다. 1998년에 노동조합 지속가능발전 자문위원회(The Trade Union Sustainable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를 발족하여 정부와 노동조합에 대한 환경 문제를 자문해왔다. 2005년에는 노동자들이 친숙하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사례 전파를 목적으로 "작업장 녹색화(Greening the workplace)" 보고서를 발간했고, 2006년에는 TUC 지부 대의원들로 하여금 사용자와 녹색 문제를 의제화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에는 영국의 노동 현장이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진단이 배경이 되었다. 노동연구원(Labour Research Department, LRD)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했는데, 500명 이상의 응답 중 76%가 공공부문(중앙정부 32%)이며, 사무직 노동자는 55%였다. 조사의 결과는 매우 적나라한(sobering reading) 것이었다. 19%의 사용자가 사업장에 적절한 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이며, 단지 11%만이 에너지 효율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사용자 중 63%는 친환경 교통 정책 촉진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물 절약 시스템을 하지 않은 곳은 57%, 녹색 구매를 하지 않는 곳은 51%, 자원 절약이나 쓰레기 감소 노력을 하지 않는 곳은 각각 34%였다. 23%만이 환경친화적 시스템을 갖췄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노동조합 개입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지 10%에 그쳤다(TUC, 2007b).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연구는 몇몇 긍정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재활용은 작업장 수준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환경친화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소한 종이류 재활용에서부터 프린터 토너, 사무가구, 컴퓨터 등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개발도상국에 보내 재활용 등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금속, 용해제, 산업 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작업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용수 절약(빗물 활용, 절약 제품 활용 등), 절연/절전기구 설치, 자가발전기 설치 등 자원 절약이 가능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샤워시설 설치 등의 녹색교통 제도를 시행한 사례들이 파악되었다.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와의 문제에서는 노조 대의원들이 환경 이슈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시간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특정한 대의원들(안전담당 등)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에 보다 유리한 위치 확보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대의원들은 사용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사용자는 자원 사용을 줄이는 가장 우선적 방법으로 '해고(cut staff)'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TUC는 작업장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환경문제 대의원(green reps)'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 내의 다양한 환경 포럼, 캠페인, 이벤트 행사(green day 등), 다양한 정책 제안('green weekend', 'a four-day week', 'less overtime')들도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TUC는 영국 전역의 여섯 개 시범 작업장에서 에너지 이용을 절감하는 노동조합 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Corus 철강, Friends Provident(금융서비스), DEFRA(환경부), TUC 본부, 스코틀랜드 전력, 대영박물관 등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직접 조사활동을 벌이고, '녹색' 참관일 지정, '노동 환경 판촉사원' 훈련, 경영진과의 협상 지원들을 하도록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TUC 본부는 심야 전력 이용을 절반으로 줄였고(매립쓰레기 폐기물은 40% 감축), 대영박물관은 전력 이용을 7%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3. 주요 산업부문의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

여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에너지산업, 건물 효율화 산업, 교통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에너지 산업

국제 산별연맹인 국제 화학, 에너지, 광산 일반 노동조합연맹(ICEM)[12]은 산업의 전환(재구조화) 과정에서 일어날 노동자의 일자리 변화가 일어날 경우, 노동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전환과 관련된 비전 제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자 교육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ICEM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첫째, 특정 산업에서 발생할 고용 영향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기반이 된 기후변화 정책과 수단, 둘째, 구조 조정의 고통을 국가와 국제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지원 자금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를 넘어서며 ICEM과 산하 산별 에너지노조들은 경쟁과 민영화로 인해서 에너지산업에서의 일자리 손실과 대변동을 겪어오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더 높은 고용손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수십 년 내에 화석연료에 기반 한 산업들이 폐쇄되어야 한다면,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모두 사라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ICEM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각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취하는 각종 정책 수단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12) ICEM은 세계에서도 가장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ICEM 산하 노동조합들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직접적으로 에너지 산업분야(석탄광산, 석유, 가스의 채굴, 정제, 발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ICEM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화학, 제약, 고무, 도자기, 제지, 부품 산업 분야를 포괄 하고 있다. 즉, ICEM은 기후변화로 인해 일자리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산업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한편 일국적인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응 사례가 있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2003년도에 독일의 IG Metall(금속노동조합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합, 유로솔라, 농민연맹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를 구성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금속노조는 (재래식) 발전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짓고 계획하고 운영하는 노동자도 가입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산업의 노동자는 총 13만명(풍력산업 종사자 46,000명 포함)으로, 석탄채굴이나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런 조합원 구성의 변화가 독일 금속노조의 재생에너지행동연맹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5년도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의 활동가이자, IG Metall 환경에너지 분과 중앙집행위원)은 금속노조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활동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기존 산업 부문의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잡어야 한다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과거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선취함으로써만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석탄 채굴을 비롯하여, 화석연료 및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산업으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게오르그, 2005)

상자글 5.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

197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연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1990년대에 노동조합과 환경단체과 연대하여 녹색일자리 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는 호주는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연구단체와 NGO가 진행한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NSW) 주의 화력발전소 사례는 정의로운 전환의 인상적인 시나리오 작업도 그중에 하나다(Bill, Mitchell and Welters, 2008).

호주 대륙의 동쪽 뉴 사우스 웨일즈에 위치한 헌터(Hunter)와 인근지역에는 석탄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석탄발전소들은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석탄채굴산업이 번성하고 있는 곳으로 그 생산량의 30%가 인근의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며, 나머지 70%는 외국으로 수출이 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합의가 점점 높아지고 호주 정부도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을 태워서 얻는 전기생산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으로 전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정의로운 전환' 시나리오는 헌터 및 인근 지역에 있는 6개의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제조, 설치, 유지와 서비스, 운영, 상품의 운송과 판매 등의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따라서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감소가 3,64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서 순 일자리 증가의 규모는 5,760에서 10,650개가 달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손실에 따라서 실업에 처해지거나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숙련 개발과 훈련, 수입 보조(income support),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 보상,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는 이러한 전환의 비용이 일방적으로 취약한 공동체와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토대를 가진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건물 효율화 산업

건축부문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1/4 정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도 매우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기후정책에서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 영역은 대단히 노동집약적이며 지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녹색일자리 창출의 핵심

영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활동은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의 사례가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DGB는 1998년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서 기존의 건물을 개선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독일 정부, 환경단체, 사용자단체들과 함께, '노동과 환경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Work and Environment)'을 결성하였다(Schneider, 2006).

이 동맹의 직접적인 목표는 건물의 단열 효과를 향상시키고, 발전된 난방기술과 태양광과 태양열 시스템과 같은 제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건물 관리 서비스(building service) 뿐만 아니라 건축, 난방, 위생 및 공조 영역에서 예상되었다. 건물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재정지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8억 달러였는데, 1차 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006-2009년까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8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제안하였고, 유럽노총(ETUC)와 환경단체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은 △매년 30만개의 아파트를 수리(renovate)하여,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2백만톤의 CO2 방출을 줄이며, △세입자 및 집주인의 난방비를 줄이고, △실업비용의 축소와 소득세의 증가로 정부는 약 40억 달러의 이익을 얻으며, △석유 수입에 대해서 보다 독립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콘덴싱 보일러/저온도 난방 보일러, △수소기술 연료전지, △태양광 및 태양열 시스템, △85% 열 회수율을 가진 환기시설, △비활성 가스를 채운 삼중 유리창, △적절한 단열 물질 등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환경·사회적 성과를 보면,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난방비를 1/7로 줄일 수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시내 중심부 및 지구를 재활성화하고, △출근거리를 줄이며, △교통체중을 줄이고,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심 구역 주거공간의 임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에 미친 효과를 보면 △수공, 건축, 난방시설 설치 분야에서 수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단열가스 생산, 단열재, 건축자재, 태양광 및 태양열 시스템 분야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졌고, △건축설계, 컨설팅 엔지니어, 환경 컨설팅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다(Peter, 2007).

한편 미국의 서비스노조(SEIU)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SEIU(서비스노조는

녹색 작업장 계획(green workplace initiative)에 착수하고 있다. 이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보전(Conservation in California)"이라는 프로그램은 주 내의 대형 사무빌딩에서 10%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빌딩 소유주와 함께 하는 혁신 파트너쉽을 형성하였는데, SEIU 지역 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뉴욕의 SEIU 32BJ지부는 건물 관리직 조합원들에게 녹색 빌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며, 주정부가 이를 지원하였다. 에너지와 물 보전, 녹색 화학, 통풍과 난방 시스템, 에너지 감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UNEP, 2008).

3) 교통 산업[13)]

교통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자가용과 화물차를 이용한 승객과 화물 운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운송수단으로부터 철도와 대중교통으로 전환(modal shift)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고려한 교통정책의 변화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유럽운수연맹(ETF, 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의 활동이다.

ETF는 2005년 5월 유럽운수연맹 대의원대회 직후, 운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룰 TRUST(TRADE UNION VISION ON SUSTAINABLE TRANSPOR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단계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결과는 2009년도 5월에 예정된 ETF 대의원 대회에서 채택될 전략문서 초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유럽운수연맹 사무총장인 Eduardo Chagas는 TRUST 프로젝트를 통해서 운수정책을 지속가능성의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는데 노동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운수노동자 조직들이 환경보호에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할 까닭으로, 환경보호가 지금 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보호 해결방안들에 노동조합원들의 이익 역시 고려될 수 있도

13)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운수노조·운수노동정책연구소가 에너지정치센터에게 의뢰하여 수행한, '기후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교통분야 · 물류부문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2009년 2월)의 내용에 기반을 둔 것이다.

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ETF, 2008).

2008년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모아진, 지속가능한 운수 시스템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운수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정책들 사이의 모순을 피하고 생태보호가 고용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운수방식에 적용하는 정책이 다른 운수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수방식에 적용되는 환경정책들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셋째, 분야별 환경위험을 다루고 더 나아가 인프라 개선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연료소비와 오염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넷째,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고원인을 유발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문제를 환경정책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일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통분야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는 RMT(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이 주목된다.[14] RMT는 철도 위주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의 배경은 영국 교통부가 2007년 말, 2008년 초 사이에 제안한 런던 히스로 공항 확장 계획이었다. 히드로 공항 인근 거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오후 3시 이후 서런던에 착륙하는 비행기의 활주로를 전환하는 관행이다. 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 활주로와 6번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십슨(Sipson) 마을 전체를 포함하여 최소한 700개 가구의 철거를 낳게 되고, 70만회 이상으로 비행 횟수를 늘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RMT는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2006년 공항을 이용한 총 473,000회의 비행 중 10만 회가 이미 유력한 철도 대안이 존재하는 12개의 목적지를 향한 것이며, 추가적인 10만 회의 비행이 개선된 철도 서비스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곳과 연결하는 노선임을 보여주었다. 즉 히스로 공항을 이용하는 비행 중 상당수가 단거리 노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 대륙 내 고속철도망의 성장이 뚜렷하며 광범한 망이 확장 중이다. 머지않아 고속 철도망이 유럽 내 7개국으로 확대되며, 이는 편안하고 저렴한 여행수단으로 항공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공항 확장계획은 부적하다고 주장하였다. RMT는 히스로 공항 확장 대신 히스로를 포함한 철도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RMT의 주장과 환경단체 및 주민단체들과 연대활동의 결과로 히스로 공항

14) RMT는 영국 최대의 전문직 운수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80,000명이며 현 위원장은 봅 크로우(Bob Crow)다. 주선 철도 및 지하철, 항만과 해운, 버스 및 도로 화물 등 모든 운수산업 부문을 포괄한다.

확장 계획은 유보되었고, RMT는 히스로 공항 확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대안을 강구한 최초의 노조가 되었다. RMT는 적절한 궤도 서비스가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RMT는 2006년 11월, 스코틀랜드 루트 이용 전략 협의에 의견을 제출하여 참여했고, 2008년 10월에는 교통 및 기후변화 기반 위원회의 자문에도 응하는 등 정책적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기획에는 구 철도망(Classic rail route)의 복원과 개선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상자글 6. RMT가 제시한 철도 투자의 효과(RMT, 2008)

① 경제: 고속철도 연결망에 대한 투자는 히스로 공항 확장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WS Watkins의 2006년 보고서는 런던발 히스로 경유 버밍엄 및 리즈 행 고속링크에는 310억 파운드가 소요되는 반면, 수익은 60년간 630억 파운드로 추산한다. 하지만 교통국의 현 히스로 확장안에 따르면 경제적 수익은 70년간 50억 파운드에 불과하다.

② 고용: 고속철도 투자는 히스로의 신규 일자리를 포함하여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첫째, 신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철도 일자리, 둘째, 신규 철도망 건설을 위한 건설업 일자리와 영국 철도 차량 제조업 재생 전망에 따른 일자리, 셋째, 철도 투자가 유발할 다른 부문 경제의 자극 통한 일자리가 예상된다.

③ 환경: 히스로 추가확장을 대체하는 고속 철도서비스는 커다란 환경적 이익을 가져온다. 비행 항로 아래의 주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소음 수준이 악화되지 않고, 공항 주변의 항공 오염 수준도 떨어질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다. 고속철도는 항공에 비해 CO_2를 8-11배 정도 더 적게 배출한다.

④ 교통: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통합적 교통 시스템의 일부가 되기에 적절하며, 지역과 지방 철도 서비스를 대체하는 대신 서로 연결한다. 통합은 철도역과 공항들이 철도 허브의 일부로 엮이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국의 현재와 같은 교통 체제(조정되지 않고, 탈규제화되

며, 사유화된) 하에서는 그러한 통합 달성은 불가능하다.

4. 해외 노조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유형

1) 녹색일자리 창출 등 정책 개발

해외의 여러 노동조합이 녹색일자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의 아폴로 동맹이나 블루-그린 동맹의 사례, 캐나다 노총의 녹색일자리 정책, 독일의 환경노동동맹, 영국의 RMT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 환경단체와 연대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환경단체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결합시키는 방안으로서 '녹색일자리'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2007년 5월에 네덜란드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는 공동으로 추진한 'Green4Sure'라는 프로젝트 보고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Green4Sure"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공공서비스 노조(ABVAKABO FNV), 네덜란드 노총(FNV), 지구의 벗(NL), 자연과 환경을 위한 협회(Society for Nature & Environment), 그린피스(NL), 세계야생동물기금(NL)이 공동으로 지원하였다. 그런데 Green4Sure 프로젝트는 다른 몇가지 기준과 함께, 노동자에게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네덜란드의 순고용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되었다. 그 결과로 제시된 Green4Sure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연간 4만명 정도의 일자리 증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경로를 제시하였다(Green4sure, 2007).

2) 사회적 협력과 지역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은 사회 주요 주체들의 협력과 특히 지역을 매개로 한 사업을 통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정부, 사용자 및 노조 3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였는데, 그 영역은 에너지, 석유정제, 철강 산업, 유리 및 시멘트 생산, 종이와 펄프 생산(최근에 교통과 건설)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회적 대화체의 역할은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를 모니터하고, 각 생산 공장에서 배출량을 할당하는 기준을 개발하며, 사회적 부작용도 점검하고 줄이는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교토 의정서에 따른 스페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야기할 경쟁력과 고용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 3자는 교토의정서의 국가적 채택에 따른 공동 감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스페인의 대표적 노조인 Confederacio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 (CC.OO)와 Union General de Trabajadores (UGT), 그리고 정부 및 경제인 협회 두 곳이다. 이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고, 참가단위는 '대화 테이블'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제에 관한 감시역할을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스페인 노동조합 연맹, 경제인 협회의 대표들과 정부 측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제2차 대화 테이블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NAP(National Allocation Plan)에서 설정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한번씩, 총 7번의 후속 대화 테이블이 진행되었다(UNEP, 2008).

한편 앞서 살펴본 미국의 아폴로 동맹의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LA의 아폴로 동맹의 활동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의 물 공급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녹색경력 사다리 훈련 프로그램/Green Career Ladder Training Programe)을 가

동하고 있다(Apollo, 2008).

3)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실현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국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앞서(2장 3절) 언급하였듯이 ITUC는 코펜하겐 협상문서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AFL-CIO은 2008년 성명서에 기후변화에 관한 입법에 “전환과 훈련 및 교육을위한 적절한 자원이 노동자와 공동체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호주노총(ACTU)은 2008년에 정책문서를 채택하면서, 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혹은 환경세로부터 얻어지는 세수의 일부를 전환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CTU, 2008).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과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에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에서 미국 의회에 발의된 리버만-워너(Lieberman-Warner)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의 아이디어가 포함되었다. 이 법안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직업 교육, 임시적인 임금 보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의 의료보호(health care)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상정되어서 하원을 통과한 왁스막-마키(Waxman-Markey)법안, 즉 청정에너지 및 안보 법안에도 녹색일자리와 관련된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호주 노동당의 캐빈 러드 총리는 “탄소오염감축계획(CPRS)”를 수립하면서,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행동기금(Climate Change Action Fund: CCAF)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 기금의 세 번째 사업 영역으로 “노동자와 공동체의 구조적 조정 사업”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획(CPRS)의 도입에 의해서 노동자와 공동체에 부적절하게 영향이 가해지는 구조적 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재각, 2009).

4) 작업 현장에서의 녹색 실천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조합이 주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작업장의 녹색화'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앞서 살펴본 영국노총(TUC)와 미국 서비스노조(SEIU)의 사례일 것이다. 그런데 '작업장의 녹색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주노총(ACTU)가 지적하고 있듯이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우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보건안전위원회 혹은 산업안전 대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 알려야 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계획 등이 포함된다. 셋째,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적 위험에 대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내부제보자)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ACTU, 2008, p.11).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작업장의 녹색화'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5) 교육, 홍보사업

노동운동 내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노동재단(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Sustainlabour)"이다. SustainLabour는 노동운동가 및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환경 의제를 적극 수용하도록 돕고, 환경 의제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7년에 여러 국가의 노동조합 운동가들이 설립한 재단이다. CSA-TUCA, ETUC 등 주요한 국제 노동조합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노동운동가 및 노동조합 활동가 교육 및 훈련, 자료 제공, 관련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컨설팅, 관련 단체 소개, 연간활동보고서 발간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Sustainlabour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는 2008년에 발간한 "기후변화의 결과와 고용 및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교육훈련 매뉴얼이

다.(Sustainlabour · UNEP, 2008)[15]. 이 매뉴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를 폭넓게 담고 있어 현장 노동조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원칙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주요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의 국제적 논의와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일국적 수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작업장에서의 행동,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한편 Sustainlabour는 2009년 5월부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제목의 원격학습 강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은 Sustainlabour와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국제 교육훈련 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ITC)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스페인어로 이루어진다. Sustainlabour는 계속 기후변화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교육훈련 자료를 펴내고 있으며,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등으로도 번역 제공하여 국제적 효용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6) 국제 수준에서의 활동

1992년에 지구환경문제를 최초로 다루었던 리우 환경회의(WSSD)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29장)"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의 국제적 활동은 2000년 초반까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국제노총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도, 고용,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흐름이 정식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SSD)'이었다.

국제자유노련과 세계노동조합연맹, 그리고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은 '국제적 노동조합들(Global Unions)'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고,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새로운 뉴딜의 형성(Fashioning A New Deal)"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다음

15) 이 교육 자료는 스페인 정부의 지원 하에 Sustainlabour와 UNEP의 "노동조합의 국제환경 프로세스의 참여 강화"(Strengthening trade union participation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cesses)"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의 네 가지 문제, △지속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의 통합, △노동자와 작업장에 기반한 전략, △고용과 사회적 (고용)전환 프로그램, △공적(public) 문제와 작업장 문제의 긴밀한 연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Global Unions, 2002)

이어 2006년 1월에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아래에,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동조합연맹, OECD노사자문위원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ustainLabour 등이 협력하여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50여명의 전 세계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였으며, 환경과 고용 안전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회의를 마치면서 노동조합 대표들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빈곤축소, 환경보호와 좋은 일자리 정책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며 기후변화 정책에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하였다(UNEP, 2006).

상자글 7. UNEP와 ILO의 국제적 지원

국제적 노동조합이 지구적 환경회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다듬고 있는데, 여기에는 UNEP와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의 중요했다. UNEP는 2006년의 회의 이후에도 '노동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연달아 펴내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7년 2월에 발표된 "노동과 환경: 자연스런 협력"(UNEP, 2007)으로, 2006년도에 개최한 회의 성과를 담은 것이다. 2008년에 발표된 두 번째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녹색일자리: 지속가능한 저탄소 세계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향하여"(UNEP, 2008)로서, 녹색일자리에 개념과 현재의 상황, 녹색일자리에 관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노동조합, NGO 들의 입장과 전략 등에 대해서 막대하게 정리하고 있다. UNEP는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경과 노동의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서 '녹색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유엔환경계획, 국제사용자연합(IEO) 그리고 국제노총과 함께 '녹색일자리 기획단(Green Jobs Initiative)'를 구성하여 활동

하고 있다는 녹색일자리 계획은 전 세계에서 창출되는 녹색일자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녹색경제에 의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 해외 노동운동의 대응 시사점

첫째, 해외의 노동조합이 기후변화 상황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 과거 환경 대 노동이라는 고답적인 대립구도에 메이거나, 정부와 자본의 산업구조 조정을 소극적으로만 회피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ITUC 같은 국제적 노동조합 기구나 각국의 노동조합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해외 노동조합은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나은 일자리를 모두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계발과 조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머지 않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더욱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의 급격한 고용위기를 떠올려 보아도, 노동조합이 엄청난 구조조정의 충격이 벌어진 이후 움직이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보다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찾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 나라와 부문에 적절한 연구와 해법이 필요하다. 사례로 살펴본 노동조합들도 처음부터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후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구도를 파악하고, 조직 내의 강약점을 새로운 전략으로 소화해내는 일은 나라마다 무척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찍이 '정의로운 전환'의 씨앗을 뿌린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조치 같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총연맹이나 산별연맹에서 연구역량과 대응 단위를 구축하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펼칠 때 현장에 유효적절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셋째, 노동현장에서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작업장에서의 실천, 녹색일자리 정책

만들기, 사회적 홍보와 교육, 국제회의에 대한 공동의 협상 전략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TUC의 녹색작업장 사례가 보여주듯, 각 지역과 현장의 수준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현장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넷째, 공동의 대응을 위한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이다. 즉 노동조합의 의지와 조망을 가지고 사회의 많은 부분을 정의로운 전환의 우호적 동맹자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전국 중앙 수준의 사회적 협의가 발달한 스페인, 북유럽의 경우를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그러나 독일의 재생에너지동맹, 미국의 아폴로 및 블루-그린 동맹, 네덜란드의 사례들은 사회의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함께 모아질 때 기후변화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만들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법제도의 신설이나 기금의 조성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만큼,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총연맹과 산별연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단위 사업장이나 산별노조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보수적인 정책과 활동으로 총노동의 통일적인 관점과 입장을 세우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무감축이 진행되어 산업 간에 차별적인 고용조정이 일어날 경우, 에너지와 기후이슈에서 노동조합의 균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앙조직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4장. 기후변화와 한국 사회

1.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한국도 2002년에 교토의정서에 비준함으로써 비준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김대중 정부나, 이후 노무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방어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반면 현재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유가 상승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와 엮어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비록 '저탄소 녹색성장'은 많은 논란의 와중에 있지만, 소비적인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녹색 가치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2008년) 7월의 G8 확대회의에서 행한 '빠른 주자(early mover)' 발언을 시작으로, 그해 광복절 행사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동을 걸었다. 이어서 올해(2009년) 초부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1월에 50조를 투자하여 96만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나아가 7월에는 5년간 총 107조를 투자하겠다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8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행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녹색뉴딜의 대부분이 환경적 논란과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명분의 토목산업이라는 점이나, 각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다. 또한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별 정책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통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단적인 사례로 녹색교통의 중심으로 철도를 강화하겠다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하고 있거나, 4대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로 인해서 철도 확장 계획이 연기되는 등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16]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판은 이 장의 보론에서 별도로 다룬다.

2.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및 산업계의 대응[17]

1) 산업계의 기후정책 대응체제

현재 산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가장 큰 기구로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들 수 있다. 대한상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 상의를 통해 기업대상 기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환경부 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으로써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연 2회에 걸쳐 개최되는 이 협의회는 올해 4월과 10월에 개최되었다. 이전까지 본 협의회의 위상은 크게 높지 않았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산업계에 민감한 사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의 통로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근 가진 10월 협의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과 정부 간의 파트너쉽 강화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의 의견을 나누는 공식적인 협의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상의와 함께 산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산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16) 정부의 기후정책을 '정책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09)를 참조할 수 있다.

17) 이 내용은 조보영·한재각(2009)의 내용을 이용하였다.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 왔으며, 실제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취지의 활동을 펼쳐왔다. 즉, 2007년 9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 실천 선언' 채택, 2008년 6월 '산업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선언식' 등을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제적 제도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입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일 것이다. 당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508개 기업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으로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1안 즉 2020년 BAU대비 21% 감축(2005년 기준 8%증가)가 65.5%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2009).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뿐 아니라 감축 방안에 있어서도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가장 선호했으며 탄소세 도입이나 총량할당에 대한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91.9%)이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가 내부에서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그 책임을 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2) 주요 쟁점별 산업계의 입장

아래에서는 대한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주요 사안별 산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감축 목표

지난 9월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나서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준비 부족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목표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산업계의 설문조사에서 65.6%에 달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21%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감축 목표 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나아가 올해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자

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미리 나서서 자칫 더 큰 감축목표치를 부여받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정부의 감축 목표치 확정을 12월 UN기후변화회의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었다. 지난 11월 18일 정부가 BAU 대비 30%감축을 확정 지으면서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 지었으나 여전히 산업계는 감축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구조이다. 제조업 비중이 28.4%이면서 철강, 석유, 화학, 시멘트 업종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7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구조상 감축 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에너지 효율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어, 더 감축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가 지적하는 감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 수단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내 놓은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접근에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국내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50~70% 정도에 불과하고, 새로운 기술적 대안으로 내놓은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적합한 저장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기술 자체도 국제적으로 2020년 이후에나 사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 바이오 연료 혼합비율 확대 역시 곡물생산량 감소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산림파괴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등 그린카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기차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결국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내용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도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②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Cap & Trade)

정부가 총량제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다. 그러나 기업의 강한 반발로 인해 법안 심사조차 지연 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추세에 부응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조속

히 준비하기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는 산업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필요한 자금이 배출권 구입으로 사용되면서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우수기업의 생산량 증가가 불가피하게 배출량 증가를 가지고 오는데 배출권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오히려 쇠퇴하는 산업이 생산량이 줄어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판매로 수익을 얻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EU-ETS의 경우 1997년 이후 10년 가까이 준비했음에도 2005~2007년 1단계 배출권 거래에서 가격 폭락, 과다 할당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을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이다.

③ 탄소세 (Carbon Tax)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제안된 경제적 조치가 탄소세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탄소세는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탄소세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환경 개성 부담금과 같은 비슷한 명목의 세금들과 중복되어 이중 과세라는 입장과 함께 조세 제도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3.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이외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환경운동 내에서도 기존의 부동산 문제,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최근의 4대상 이슈 등과 같이 쟁점이 되는 국내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국

제회의를 계기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만 꾸려졌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가, 올해에는 기존의 환경단체를 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과 농민회,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면서 폭넓어졌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상당수가 코펜하겐에 참가자를 파견할 예정에 있다.

아래에서는 기후변화에 계속 대응해왔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분류하여 현홍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

현재 시민단체의 기후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중심의 대응 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부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활동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나 근래에 들어 소비자단체, 생활협동조합, 교사모임 등 다양한 시민사회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함으로써 기후변화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문화되고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단순히 이념적이거나 윤리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캠페인 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전달이 요구되고 있다.

②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행사업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실행 사업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가장 쉽게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바구니 들기 등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마을 단위 사업에 기후변화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구, 군 단위의 활동이나 작게는 지역의 면단위까지 확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공원 확충이나 태양광, 태양열 설비의 설치 등 단기사업이 많고,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기보다는 관 주도의 사업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가 직접 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집수리를 통한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적극적인 실행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행사업은 많은 경제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지역단체, 지역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③ 정책 제안 및 정부 모니터링

기후변화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를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존에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던 그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후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성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개별 단체가 대응하기 보다는 연대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힘을 키우고 있다. 한편 기후문제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 전문성을 가진 작은 단체들이 새롭게 꾸려지고 있다.

④ 국제연대사업

기후변화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그 영향은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적 논의에 따라 초국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문제를 풀기위해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국제협력은 언어의 문제에 전문성 문제 등 어려움으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UN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진행해 온 단체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에서 이해관계자인 여성, 농민, 노동자 집단에서도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앞서 소개하였듯이 정부는 올해 8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나, 시민사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 일부 단체는 2020년에 2005년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해야 한다는 안(환경운동연합, 2009)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기후문제를 다루는 단체들 사이의

체계적인 논의가 부재했으며 폭넓은 동감대고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환경정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9월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의 제언"(이진우, 2009c)에 의하면, 한국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최소한 25%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 량에 따른 책임과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한 "책임역량지수(Responsibility Capacity Indicator: RCI)" 모델을 통해서 산출된 결론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①전 세계 공유비전 우선의 원칙, ② 감축 목표 차별화의 원칙, ③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④ '1990'년도 기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한국이 지금까지의 온실가스 배출한 양에 따른,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부록 :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정책 비판

이명박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고탄소 회색성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의 핵심에는 올해(2009년) 1월초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 같은 달에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안)', 7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그리고 8월에 발표되고 11월에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간력하게 정리하고 비판하도록 하겠다.

1) 녹색뉴딜 사업

이명박 정부가 2009년 1월 6일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2009년부

터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를 투자해서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뉴딜'인지 극히 회의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름을 빌려온 미국 루즈벨트 시기의 '뉴딜(New Deal)'은 테네시강 공사와 같은 토목건설사업 보다 광범한 사회정책적 요소들이 더욱 중요했다. 유효수효를 창출할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뿐 아니라, 기업과 부자들의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거나 적극적인 소득분배정책을 통해서 사회 및 경제권력의 균형을 맞춰 주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에는 이런 사회정책적 요소는 전무하고, 대신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지출계획이 주로 고려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 방안으로 그나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창출 예상 일자리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상에 있는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16.6명/10억원)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해낸 것이다. 이 일자리들이 정확히 어떤 것일지 정부도 잘 모르고 있지만, 대부분이 건설업의 일시적 단순 노무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반짝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녹색뉴딜을 통해서 가장 긴급한 환경문제라고 할 수 이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토목건설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환경파괴의 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

2) 녹색성장기본법안의 문제점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2009년 1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자격도 없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이름으로 입법예고하고 서둘러 공청회를 진행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 법안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조화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그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법안은 시장 육성과 '성장'의 기조 하에 짜여져 있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합한 법안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요한 몇가지 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36조)은 온실가스 감축 원칙은 천명하고 있으나, 감축의 의무성과 이를 강제할 수단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 제시되고 있는 감축 수단은 시장기제의 활용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방향도 명시되지 않았다. 한편 원자력 산업 육성(46조)의 경우, '녹색' 전략에 원자력 발전 육성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지속가능한 물관리(49조)의 경우에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11월 9일, 녹색성장기본법안은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원안 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파행적으로 통과됐다. 기후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녹색성장'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하위개념으로 위치지우고 말았다. 또한 산업계의 반대가 거셌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도 대폭 후퇴하였다. 는 "배출허용총량 및 기타 국제적 인정되는 거래로 제도"로 개념적 폭을 넓혔으며,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관리업체(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게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18]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워진 계획이다. 정부는 제시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 등 3대 전략 이행하는 데에 5년간 총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총 107.4조원('09-'13)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2013년까지의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목표만 제시가 되어 있을 뿐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18) '총량배출 배출건 거래제'는 '대기'라는 공유지를 사유화·상품화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는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3세계 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않아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 등이 주요 대책으로 올라와 있어 기후변화 대책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것도 특징이다. 전체 예산의 50% 가량이 투입되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항목 예산의 63.7%가 "4대강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산업부문의 저감대책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보다는 생태산업단지 등 기존의 에너지 효율화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한 채 에너지 효율성 강화, 자원순환형 시스템 도입 등은 단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늦춰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 정책은 기존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가진 소극적인 접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극적인 목표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포기하고 RPS(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접근도 문제로 평가된다.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지난 8월 4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의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된 시나리오 3가지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1%, 27%, 30% 감축 시나리오(2005년 대비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 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축수단으로서 '그린빌딩 확대', '녹색교통체계로 전환', '녹색 공정혁신', '녹색기술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저탄소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감축 시나리오조차도 대단히 보수적인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한국의 책임을 보여주는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교토의정서에 의해 38개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22위를 기록하고 있다. 배출량이 1990년 약 3억t에서 2006년 6억t가량으로 늘어나 증가 속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101.1% 증가해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기후정의'의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1인당 배출량을 보더라도, 한국은 전세계에서 22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교토의정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감축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스스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표5> 녹색성장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

시나리오	감축목표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예시)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BAU 대비	'05년 기준		
1	△21%	+ 8%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도입	·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2	△27%	동결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부담	·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 하이브리드카 보급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일부 도입
3	△30%	△4%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	·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 CCS 도입 강화

5) 소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저탄소'에도 '녹색'에도 걸맞지 않은, 단기적 건설 경기 부양과 기술시장화에만 주력하는 '고탄소' '회색 성장'이며, 사회적 합의 형성과 설득 노력조차 방기하는 '비녹색 권위주의 거버넌스'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후변화 대책인양, 녹색인양 매일같이 홍보되어 더욱 큰 폐해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 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심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녹색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매우 단기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녹색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자리 역시 대부분이 일용 노동부분에 치중 되어있어, 투자와 연구를 통한 고급 인력 양상과 새로운 녹색산업의 개발과 확대로 보기 매우 어렵다. 또한 기존의 토목 중심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놓음으로써 새로운 산업 구조로 변화해야만 하는 한국의 구조에서 오히려 변화의 시간을 늦어지게 하는 미봉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지역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인해 지역 정부의 자발성이 위축 되고 있다. 먼저 지역정부와의 연계를 하기 위한 각 지역마다의 산업과 환경, 시민사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각 지역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녹색 정책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세우기에는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기후변화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부가 모든 사업과 예산을 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여도 매우 적을 것이다.

셋째, 더 나은 녹색전략을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나 논의과정이 생략 되어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의 생략과 간소화로 인해 오히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잦은 논쟁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장. 기후변화와 한국의 노동

1.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산업과 고용의 변화 전망

앞서(1장 3절) 설명하였듯이, 기후변화와 그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완화 정책은 기존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기존 산업에 의한 고용 축소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서 유럽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ETUC이 주도하여 진행한 "기후변화와 고용" 보고서가 있다(ETUC et. al., 2007).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두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 (1)기화변화 자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특히 기후에 민감한 산업 분야인 농업・임업・어업, 관광, 금융・보험업, 보건산업, 인프라, 에너지산업을 대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2)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너지산업, 석유산업, 교통운수업, 철강제철업, 시멘트산업, 건설업).

<표6> 기후정책에 의해서 영향받는 분야별 고용의 변화 예측
(ETUC et. al., 2007에서 정리)

부정적 영향 분야	긍정적 영향 분야
철강산업의 일자리	–
석탄산업의 일자리	–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분야의 일자리	에너지I 효율 및 전력소비 감소 관련 일자리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일자리
도로교통 분야의 일자리	철도 및 대중교통 분야의 일자리
–	건물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건축/건설 일자리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고용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예측치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고는 힘들다. 다만 대략적인 고용변화의 경향만을 보여주면 위의 표와 같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기후정책)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에 의존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분야의 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점은 3장에서 해외 노조들의 접근에서 살펴보았던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와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녹색일자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기후정책에 의해서 영향받는 산업 부문과 고용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치를 확정하면서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제시되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각 부문별로 향후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정책에 의해서 각 부문별·산업별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더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부문별 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정책에 의해서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주요 산업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각각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산업 부문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8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2 배출). 이외에 산업공정 분야에서 10.9%, 농업 분야에서 2.7%, 폐기물 분야에서 2.5%의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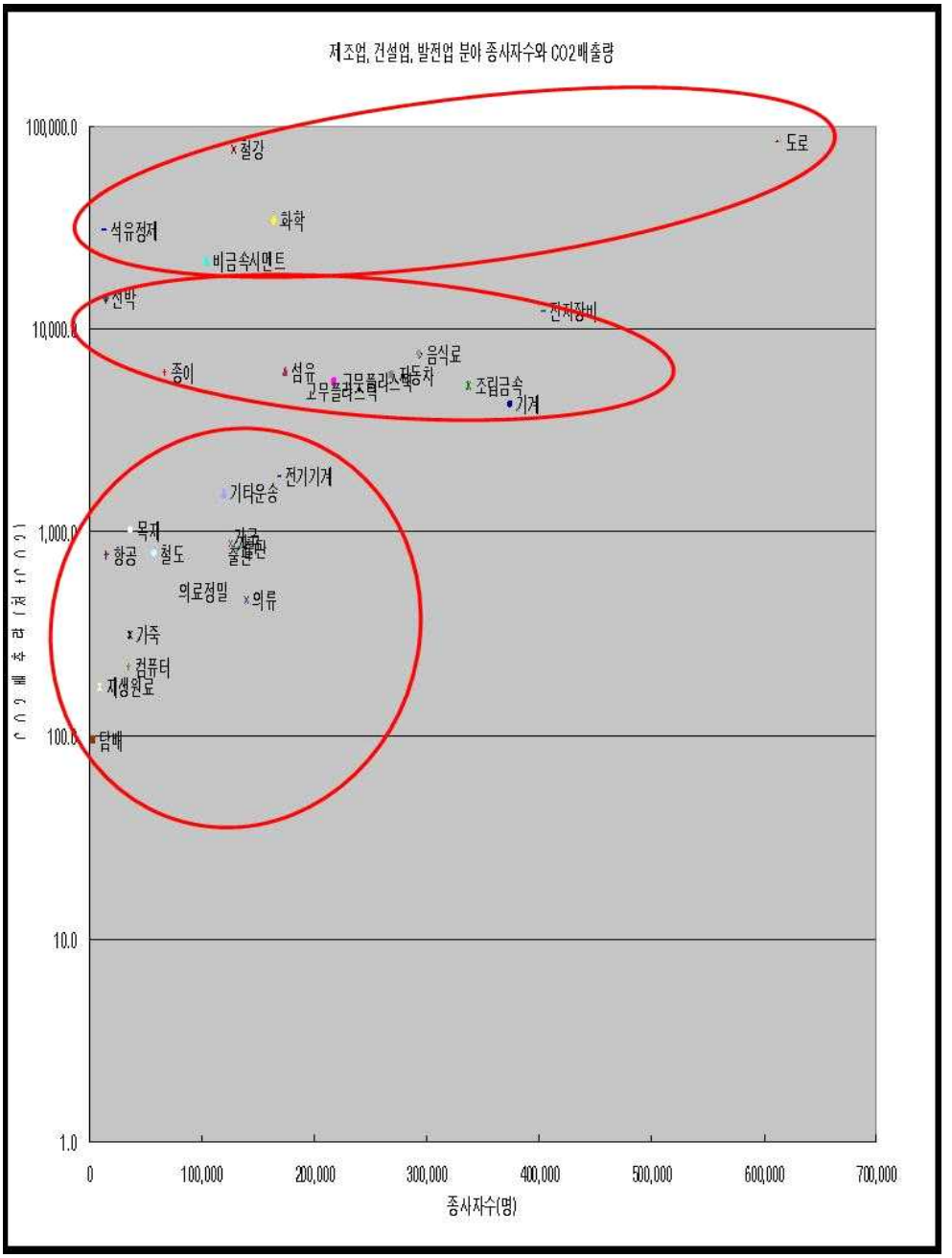
가스가 배출된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분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연료연소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발전 등의 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36.0%(2006년도 기준)이며, 제조업 및 건설업이 30.0%이며, 수송이 20.2%, 광업, 농림어업, 가정・상업, 공공・기타가 14.0%를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이 큰 ①에너지산업, ②제조업, ③수송분야의 세부산업/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종사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표7> 제조업, 수송분야, 발전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CO2배출량 현황
(단위: 개, 명, 천CO2톤,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대분류	중분류	약칭	사업체수	종사자수	CO2배출량
제조업1)	소계		336,955	3,418,383	224,185.5
	음·식료품 제조업	음식료	59,197	292,908	7,577.6
	담배 제조업	담배	13	2,989	94.4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섬유	23,289	173,600	6,202.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류	21,920	139,676	468.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4,224	36,005	313.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목재	7,056	36,333	1,03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종이	5,421	66,461	6,112.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	22,205	130,452	834.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석유정제	179	13,116	30,529.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	7,558	163,697	34,268.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15,736	217,876	5,47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비금속시멘트	9,852	103,715	21,849.3
	제 1차 금속산업	철강	5,406	127,733	76,586.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조립금속	52,283	337,059	5,285.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계	34,520	374,093	4,286.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컴퓨터	1,465	34,644	216.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기계	16,321	167,778	1,864.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장비	8,663	403,373	12,179.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정밀	6,670	74,161	51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6,350	269,103	5,889.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운송	1,827	119,568	1,560.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	25,855	125,237	875.6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원료	945	8,806	174.7
수송분야2)	소계		313,570	653,464	99,841.4
	철도	철도	84)	57,0074)	789.7
	항공	항공	156	14,841	778.3
	도로수송	도로	311,966	613,355	84,062.8
	선박	선박	1,066	14,482	14,210.6
발전업3)	석탄·천연가스 발전+송배전업	발전	115	29,421	164,339.2

1) 제조업의 중분류 체계는 표준산업분류체계(8차)에 의한 것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전국사업체조사(2006년도)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CO2 배출량은 지경부・에너지관리공단(2009) 자료.
2) 수송분야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표준산업분류체계(8차)에 따른 전국사업체조사(2006년도)에서 '운수업' 중에서 3단계 분류인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과 2단계 분류인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여객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부분은 제외. CO2 배출량은 지경부(2009) 자료.
3) 발전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표준사업분류체계(9차)에 따른 전국사업체조사(2007년도)에서 '전기업' 중 발전업의 '화력발전업'과 송전 및 배전업 부문의 종사자 수를 합한 것임. CO2 배출량은 지경부(2009)의 자료 중, 석탄과 천연가스 부문을 합계하여 사용함.
4) 통계청이 발행하는 <2008 운수업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3> 제조업, 수송분야 종사자수와 CO2 배출량



앞의 표는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수송분야의 세부 분류별 그리고 발전산업 각각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각각의 세부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산업은 역시 발전산업으로서 2007년도에 대략 1억 6천만 CO2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많은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도로수송 산업으로서 2006년도에 총 6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그림은 발전산업을 제외하고, 각 세부 산업별 종사자수와 온실가스 배출량를 각각 X축과 Y축(로그 스케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로 보아 대략 3가지 집단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자리한 집단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실시될 경우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수송산업의 도로분야로서, 가장 많은 양의 CO2를 배출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수(61만여명)의 종사자가 존재한다. 도로분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의 경우 1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어서 화학산업은 철강산업보다 배출량은 적지만 종사자수는 좀더 많은 16만명이며, 그 다음 순위의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 석유정제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1만3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위의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시멘트업의 경우 1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향후 이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이 산업에서 나타나게 될 고용의 변화에 대해서 관찰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2) 한국의 녹색일자리 현황과 잠재력

한국의 녹색일자리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녹색일자리가 대단히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2009년) 초 '녹색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살

리기'와 같은 환경적 논란이 많은 대규모 토목산업의 일자리까지도 녹색일자리로 포함시키면서 녹색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나마 녹색일자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한국노동연구원, 2009), 여기서는 우선 녹색산업을 규정하고 여기에 고용된 일자리를 녹색일자리로 파악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대로 녹색산업으로 규정되는 경제 분야도 대단히 광범위하며 기존의 고용통계에서 이를 일일이 분리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를 이용하여 한국의 녹색일자리의 일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보면 환경산업은 제조업,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환경부문 종사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환경산업 종사자는 390,406명인데 이 중 환경부문 종사자는 178,174명으로 환경산업에서의 환경부문 종사자 비중은 45.6%이다. 이러한 수치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은 환경의 녹색일자리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들(UNEP et al., 2009; Polin et al., 2007)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녹색일자리는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분야, 대중교통과 철도 분야, 재활용산업 분야,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통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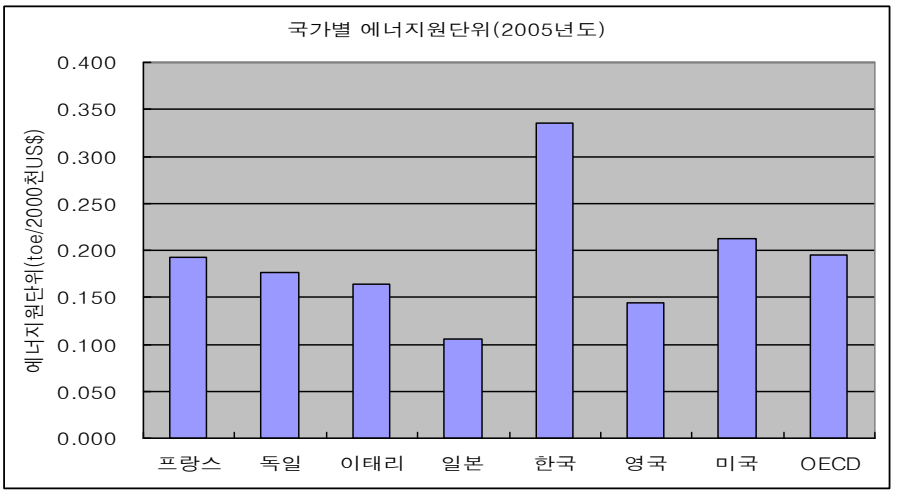
<표 8> 환경산업별 종사자 수 (한국노동연구원(2008), 단위: 명, %)

	종사자수(A)		환경부문 종사자수(B)		구성비		B/A*100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전산업	425,096	390,406	184,333	178,174	100.0	100.0	43.4	45.6
제조업	74,041	71,880	50,161	46,640	27.2	26.2	67.7	64.9
수도사업	19,752	19,041	18,616	17,486	10.1	9.8	94.2	91.8
건설업	180,803	137,427	21,301	14,408	11.6	8.1	11.8	10.5
도소매업	40,712	43,219	40,712	43,219	22.1	24.3	100.0	100.0
사업서비스업	47,113	50,699	9,317	9,990	5.1	5.6	19.8	19.7
공공행정업	65	-	2	-	0.0	-	3.1	-
개인서비스업	62,610	68,140	44,224	46,431	24.0	26.1	70.6	68.1

* 자료: 환경부, <2005, 2006 환경산업통계조사>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한국은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투자가 아직 낮으며 또한 에너지·환경 효율성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효율을 보여주는 수치로서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단위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참조). 이는 그 만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녹색일자리의 창출 잠재량을 보여준다. 또한 2000~2006년의 환경예산의 증가율(3.2%)가 GDP 연평균 성장률(7.5%)의 절반도 되지 않아서 환경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서울경제, 2008),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예산이 증가할 경우에도 많은 수의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환경예산의 증가로 나타날 환경보호서비스 산출액 10억당 6.9명의 취업유발계수(2007년도 기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녹색사회연구소, 2009, 70쪽).

<그림 4> 국가별 에너지원단위 비교 (에너지관리공단, 2007)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녹색일자리의 잠재량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환경정의는 2006년에 '환경·고용·복지 문제의 통합 접근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자원 분야', '에너지분야', '환경보건분야', 그리고 '환경산업'에서의 일자리를 다루었다(환경정의, 2006a; 2006b). 이 중에서 '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즉, 녹색일자리)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윤순진(2006)은 제2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도별 발전설비 용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면, 최소 1만개의 일자리에서 3만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윤순진, 2006; 환경정의 2006b).

<표 9>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잠재력 (윤순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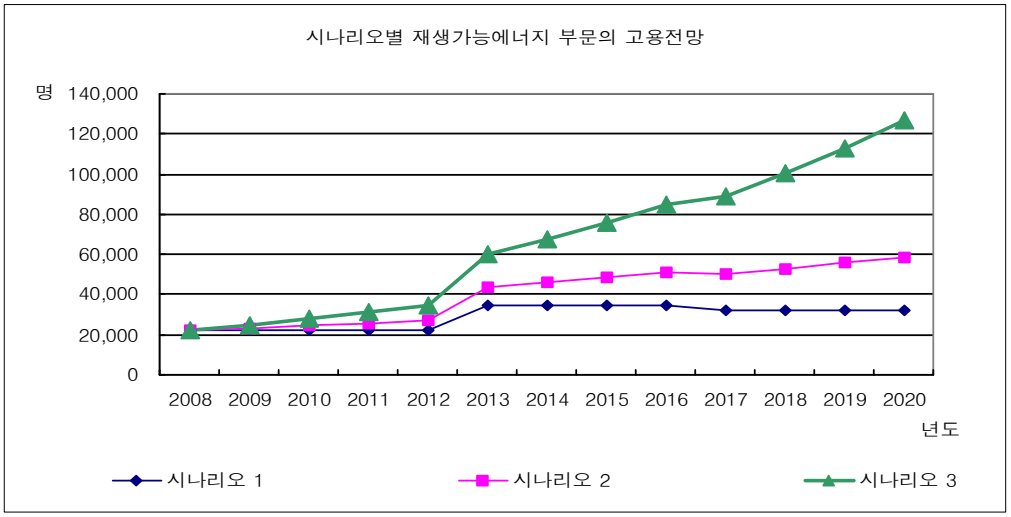
적용사례	원별	제조	건설	유지·보수	총일자리수
미국 중대서양지역	풍력	4,490	967	173	5,620
	태양광	25,412	6,667		32,079
	소계	29,902	7,797		**37,699**
미국 캘리포니아주	풍력	-	3,618	502	4,120
	태양광	-	5,804	123	5,927
	바이오매스	-	204	141	345
	소계	-	9,626	766	**10,392**
캐나다	풍력(육지)	4,279	1,239	173	5,691
	풍력(해양)	(4,279)	(1,520)	(173)	(5,972)
	태양광	15,283	5,772	102	21,157
	바이오매스	110		59	169
	소계	26,683(26,964)		334	**27,017(27,298)**

한편 진보정치연구소의 연구(2007)에 의하면, 윤순진의 연구에서 활용한 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계획를 대신하여 새롭게 만든 '에너지 전환시나리오 2020'를 이용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녹색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용량을 74,969M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가적으로 발전용량을 74,734MW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립·운영하는 것(시나리오 1)이며, 두 번째는 그 설비를 점차 생산 및 제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간 규모에서 생산·제조하는 것(시나리오 2)이고, 세 번째는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제조하는 것(시나리오 3)이다. 이러한 3가지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020' 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3년간 최소 일년 짜리 일자리 37만 명에서 최대 85만 명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진보정치연구소, 2007).

물론 녹색일자리와 관련하여 아직 정부의 정책이 명확히 정해지지 못한 문제와 또한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고용의 축소 가능성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 또한 이를 연결하는 '녹색일자리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 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녹색일자리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그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지를 자세히 분석하는 정책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림 5> 시나리오별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고용전망 (진보정치연구소, 2007)



2. 기후변화와 한국의 노동운동

1) 환경 문제와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 환경운동의 태동기에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었다. 한국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모두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태동하여 민주화 투쟁의 성과에 힘입어 성장했고,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거대한 흐름에 각각 한 몫을 담당하였으며 운동의 구성 인자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1980년대의 원진레이온 투쟁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보건 영역에서 반공해운동과 산재추방운동의 형태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이 견고하게 연대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다.[19] 따라서 애초 한국에서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은 우호적 관계로 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상훈,

19) 1990년대에도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경험은 지역에서 자주 관찰된다. "주로 울산과 창원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1993년 현대중공업 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운동, 1995년 한국티타늄 공장 건설저지운동, 1998년 한화 불법폐수방류진상규명 활동 같은 활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해당지역의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활동을 펼쳤던 사례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함께 연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이헌석, 2008, 28쪽)

2009).

그러나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은 점차 관심사와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직접적인 왕래와 연대는 점차 줄어 들었다. 이런 차이는 환경운동이 공해피해자 중심의 계급적 공해추방운동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탈계급적 시민운동으로 변화되면서 더욱 뚜렷해진다고 평가된다. 태동 당시부터 생산력주의에 비판적이었던 환경운동은 노동운동이 부의 재분배에만 관심을 둘 뿐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체계의 반생태적 성격에는 관심이 적다는 여긴 반면, 노동운동은 빠르게 성장한 환경운동이 환경파괴에 내재된 계급적,구조적인 불평등을 무시함으로써 계급 모순을 희석하고 체제유지적인 보수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필렬, 2007)

실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핵발전소・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두고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발전산업과 가스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여 감행한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이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중심의 발전산업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민영화 계획에 동조하는 흐름도 나타나면서 갈등이 극적으로 분출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역설적으로 두 운동 사이의 연대 필요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운동은 환경운동과의 연대의 매개고리로서 '사회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켰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전면화되면서 시장화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개발한 개념이었지만, 노동-환경 연대를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담론을 제공해주었다. 노동-환경 연대의 중심에는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부문과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부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발전파업을 거치면서 두 운동진영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에너지산업 분야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은 2005년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글 출범시키고,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반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20], 또한 2007년에는 시민사회와 노동 단체들이 안전, 공공성 등을 화두로 철도·지하철 문제를 풀기 위해 '철도·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철도·지하철 네트워크)를 창립했다. 네트

20)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전력, 가스, 원자력발전 등)과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워크는 대중교통 요금 문제부터 역사 민간위탁과 상업시설 도입, 분진·석면 등 지하 환경,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문제 등을 의제로 잡았다.

이외에도 석면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지하철노조 등이 연대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의 폭을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에서 많이 발견되는 환경보건과 산업안전 분야를 공동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노동-환경의 전형적인 연대사례라고 할 것이다(한재각, 2008a; 허철행, 2008). 또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08년 6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도 노동-환경 연대의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김이태 박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폭로했고, 공공연구노조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화 백지화와 연구자 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초점을 맞춘 노동조합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월에 기후변화와 노동조합의 문제를 최초로 다룬 보고서인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하여"를 발전노조를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주요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2009년 상반기에는 공공운수연맹은 '노동자 환경학교'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교육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에너지 관련 노조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올해는 노동조합들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공동대응단에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연맹, 건설산업연맹, 그리고 발전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환경관리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2) 민주노총 조합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자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작업은 없었다. 최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행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노동자의 기후변화 인식을 살펴본다.[21] 한국의 노동자들은 우선 기후변화의 근본원인으로서

“자본주의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90.6%가 동의하였다.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이용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83.8%가 동감을 표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일부 포기해야”한다는 주장에도 64.2%가 동감을 표했다. 한편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34.4%가 동의하여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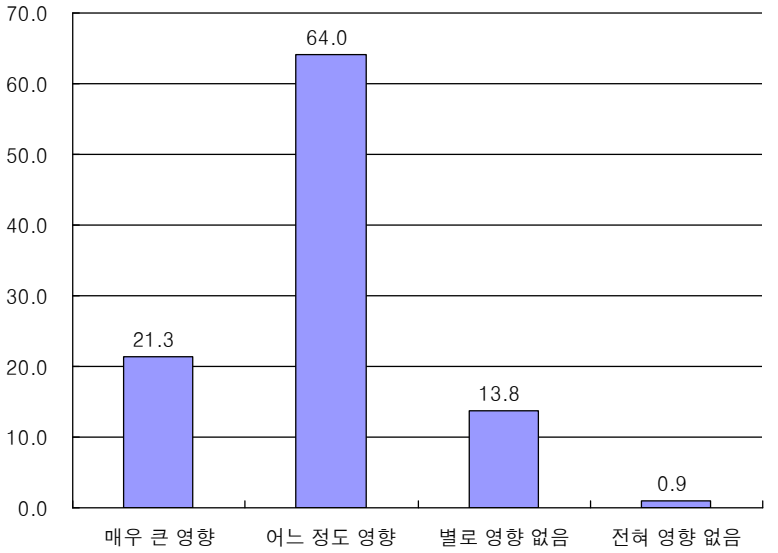
기후변화가 노동자에 주는 영향들에 대한 공감 정도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 적용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로 인한 생산과정의 변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변화”,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 침해” 등 네 가지 문항으로 물어본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고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85.3%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의 일차적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답변이 82% 가량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6.2%가 긍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 노력과 희생 필요하다는 공감도 76%에 이르러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고용변화 감수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8%를 상회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설문결과는 모순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과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 감수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고용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이 주로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같은 자본 중심의 변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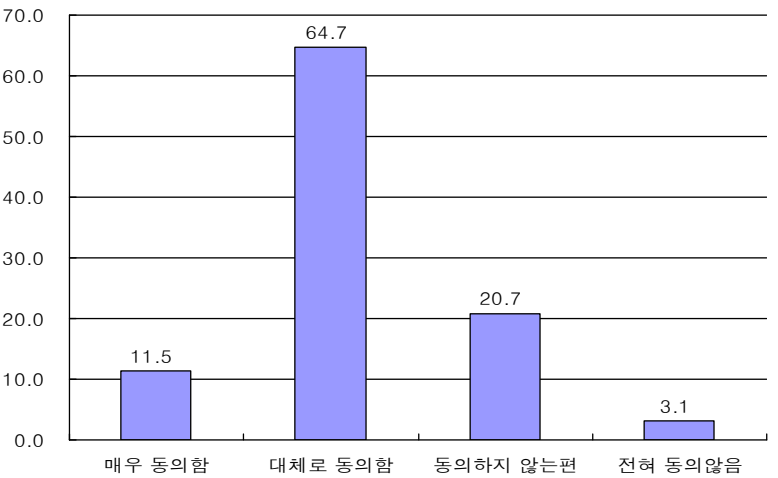
---

21) 이 조사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명의로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하여 2009년 8월말부터 9월말까지 배포/수거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1255명의 샘플을 확보하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77% 이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후변화와 노동현장의 대응 전략」(2009)의 3장 “기후변화에 대한 노동 현장의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설문조사는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통합환경에너지분과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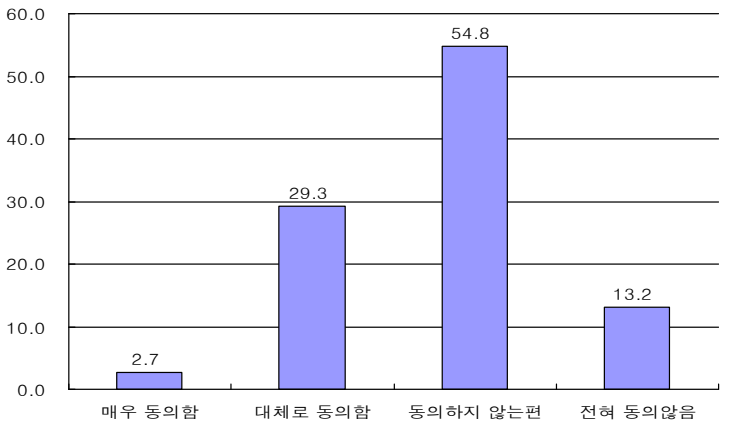
<그림 6> 기후변화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변화에 대한 동감 정도



<그림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 노력과 희생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그림 8> “기후변화 대처 위해서는 고용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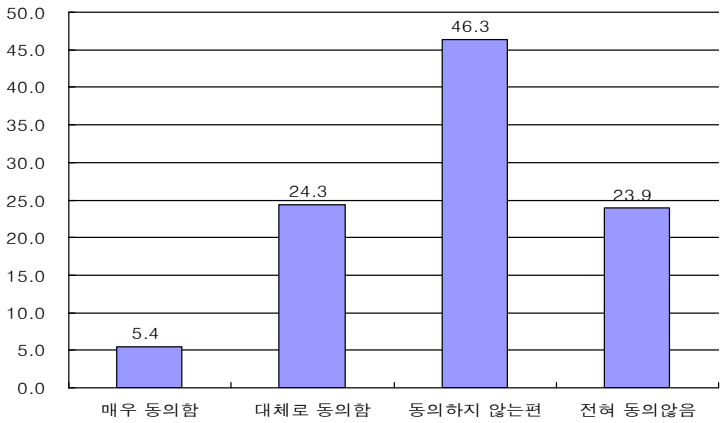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해서 개별 노동조합(지부)의 현장 대응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실제 대응은 매우 미진했고, 선전과 조합원 교육 사례가 그나마 있는 편이었다. 대응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 72.6%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녹색일자리(친환경 고용 창출 및 유지) 방안”에 대한 요청이 35.2%로 가장 많으며,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회적 협력 방안” 비율도 높았다. “화석에너지 이용 감축 방안”은 현재 응답자의 정책 수요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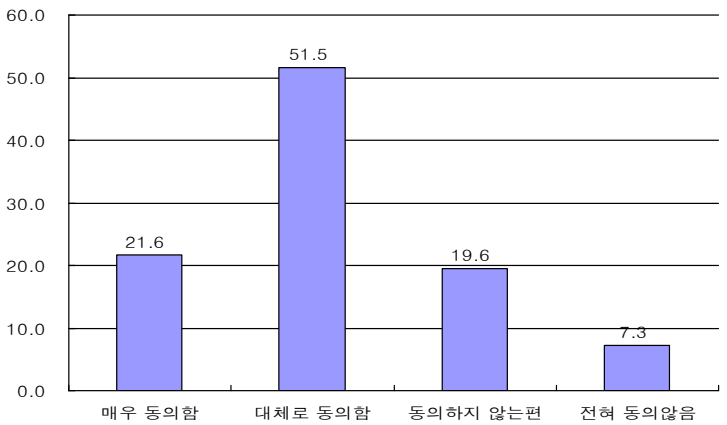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응답 중에는 몇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 우선 노동자들은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90%가 동감을 표시하여, 환경부가 2008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83.7%의 동감 표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기 사용량 억제”에는 반대가 높았고, “탄소세 도입”에는 찬성이 높았다. 전자에 대한 반대 의견은 빈곤층이나 소비자에게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피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탄소세의 경우,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나 소비자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 조사의 응답자들은 배출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회 형평성의 차원에서 더 많은 이들이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전기요금 인상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그림 10>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감 정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노총 조합원의 기후변화 인식을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제성장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예상보다 높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 위주의 모델보다는 평등과 분배모델에 무게 중심을 두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평등과 분배에 대한 우선적 접근에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함께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개발과 성장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입장은 기후변화를 '순수' 환경문제로 보는 일부 환경단체의 관점과 달리, 경제사회의 시스템을 원인으로 보는 진보진영의 근본주의적 입장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66%로 높기는 하나, 적지 않은 34%의 노동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계에서도 정부의 녹색성장의 담론 선점의 결과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조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정의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변화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이 입게 될 피해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인식과 그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과제로서 '녹색일자리' 등을 꼽은 것은 고용과 같은 이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장. 결론

앞서 기후변화의 위기의 심각성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질 기후변화 국제협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국제노동조합의 입장도 정리해보았다. 이어 해외 노둥운동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개발해온 논의와 실천을 점검하고, 한국사회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도 시급히 기후위기 및 그 해결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며,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또한 당면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론을 맺는 이 장에서는 COP15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 노동운동진영이 채택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을 제시하며,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세부 과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COP 15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바람직한 입장 제안

심화하는 기후변화를 목도하는 지금의 상황은 위급하지만, COP 15에서 다루어질 복잡미묘한 여러 이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의 동의나 합의가 만들어질 여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며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일천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진보적 시민-환경 세력과 함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수준의 입장을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노동운동 내부의 인지와 지지를 높여내야 할 것이다.

첫째, 코펜하겐 COP15에서 교토 체제를 대체할 국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하며, 더 이상 합의가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코펜하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교토의정서 효력이 만료되는 2012년과 그 이후 대응과정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시대로 기록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다. 한국의 노동운동도 전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협상 당사국들을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IPCC의 권고안 이하로 후퇴해서는 안된다. IPCC 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세기 안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이하로 안정화시켜야 하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제노총은 이를 지지하면서 전세계는 2050년까지 1990년대 대비하여 온실가스 50%를 감축하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25-40%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2] 한국의 노동운동도 국제노총과 함께 이 입장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적 책임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목표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기후정의의 원칙이 국제협상 결과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선진국 풍요의 산물이며 따라서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기후부채'(climate debt)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신의 역사적 책임에 합당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놓아야 할 뿐 아니라, 제3세계에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정·기술적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일국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으로 인해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고통과 비용이 전가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 고용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주장하여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장 기반의 접근을 비판하고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대응 비용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그간 기후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 온실가스 감축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통한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정부는 왜곡된 통계치를 보여주

22) 심지어 IPCC의 권고안이 너무 보수적이고, 350ppm까지는 낮춰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해, 사실상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왔다. 기실 시장 메커니즘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다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 국제노총(ITUC)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노동조합은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하거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적 접근의 문제점을 적극 비판하면서, 선진국 노동조합의 시장주의적 편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다섯째, REDD, 핵발전, CCS(탄소포집 및 저장) 등 잘못된 해법이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COP15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REDD(개발도상국의 삼림 감소와 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 제도는 삼림에 의존해 살고 있는 지역 토착민들의 이용권과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NGO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거래의 대상이 삼으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서 보듯이 핵발전은 심각한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에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왜곡된 환상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지하나 해양에 저장한다는 CCS는 '공상과학'에 가까우며,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만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상자글 8. 한국의 노동조합은 '탄소유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후위기가 가진 전지구성과 국민국가(혹은 지역 블록)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가진 국지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앞서(3장 1절) 잠시 살펴본 '탄소유출'과 '국경조정 메카니즘'에 대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낮은 임금으로 덩핌하고 있는 중국의 상품이 범람하여 국내 산업이 타격받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가 도입되고 만약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할 경우에 중국 상품에 '탄소 관세'를 요구·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반대로 유럽연합이 '탄세 관세'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그와 같은 규제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한국의 노동조합은 탄소 규제의 완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향후 한국의 노동운동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급히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2.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과제

한국의 노동운동진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노동조합도 시급히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으로서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이것은 앞절에서 정리한 COP 15의 주요 쟁점과 입장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과제를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23]

첫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지금 노동계에

23) 이 부분은 이유진(2009)의 한국사회포럼,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세션의 토론문 일부를 활용하였다.

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조합원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이다(가장 우선적으로 노조의 지도자, 간부, 활동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또한 노동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상반기에 공공운수연맹이 진행한 '노동자 환경학교'가 한가지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산업별, 집단별로 적합한 강사와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산업별 특성상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의 내용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산업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기후변화 가이드 북"과 같이 분야별로 전문화한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노동조합 간부 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는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더라도 특정 산업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한 해석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둘째, 총연맹과 산별노조 차원에서 '기후변화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나라에서도 사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전략과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우선 새로운 기구는 기후변화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쟁점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전지구적인 기후협상과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별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해결 원칙을 마련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원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과 노동조합의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에 노동계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5장 1절)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기후정책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런 정책들이 노동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참여는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기후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의 정당성과 가

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본 스페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사례와 최근(2009년 11월)에 영국 정부에 의해서 구성된 '정의로운 전환 포럼'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기후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위에서, 그에 따른 비용 및 고통 그리고 녹색일자리 등의 새로운 기회가 형평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운동이 환경 보전만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또한 노동운동도 노동자의 권리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불가피한 것으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진영은 협력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공통의 기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산업보건'의 영역으로, 전통적으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서로 밀접히 연관된 영역이었다. 이 영역에서부터 연대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시에 '고용'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환경운동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네덜란드의 그린포슈어 프로젝트나 미국의 블루-그린 동맹 등의 여러 실험들을 참고할 수 있다.

3. 기후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몇가지 세부 과제

위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제의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보록 하겠다.

첫째, 노동조합의 기후변화 활동으로서 '작업장의 녹색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살펴본 노조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작업장의 에너지 이용 절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이들이 전체의 93.3%이며, 적극적인 동의가 36.3%에 달한다. '작업장의 녹색화'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으로서, UNEP, ILO, 국제노총 등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노총(TUC)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환경 대의원(green representative)'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직에까지 연결해줄 조직체계상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전략적인 과제로 제시한 노동자·조합원에 대한 교육, 노조의 기후변화위원회의 활동이나, 앞서 제안한 '작업장 녹색화' 프로그램과 같은 실천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역시 영국노총의 환경 대의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노총(CLC)의 경우는 노동조합 내부에 환경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적 기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주로 노조내 산업보건부서나 위원회로부터 환경·기후변화를 다루는 인력이 배치되거나, 이를 다루는 대의원들이 활동영역을 넓혀서 환경·기후 이슈까지 포괄하고 있다.

셋째, 단체협상을 이용하여 환경·기후변화 쟁점을 다루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이미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는 접근이다. 이를 기후변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작업장 녹색화' 프로그램, '환경대의원', 기후·환경 교육, 또한 작업장 급식에서의 지역먹거리 이용 등을 보장하는 표준단협안의 개발과 핵심적인 사업장에서의 시범적 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조직체계와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산업과 지역 차원에서 실행될 것인데, 공간적으로 중복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석유화학과 같은 특정한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총연맹과 산별노조 본부에 기후변화·환경 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의 핵심적인 고리로서, 인적 교류가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해외 노동조합에서는 환경운동(혹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참여·관여하던 인물들이 노동조합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도록 선임하여, 두 운동사이의 연대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인적교류(파견, 혹은 인턴 교환)을 시도해볼 수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와 고용에 관해서 몇가지 연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

리오)에 의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급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의 효과, 그리고 주요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한편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연공제로 짜여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직무급 중심의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전략의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소득층 및 미숙련 노동자들이 녹색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일종의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ACTU(2008), 'Principles and Policy on Global Warming: ACTU Position Paper', March 2008

AFL-CIO(2008), 'Greening the Economy : A Climate Change and Jobs Strategy that works for all'

Apollo Alliance(2008), The New Apollo Program: Clean Energy, Good Jobs

Appllo Alliance(2004), New Energy for America

Bob Baugh(2009), 'Standing at the crossroads: green jobs for a blue economy', Working on Change: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climate change, Green Alliance, UK.

Bule-Green Canada(2009), 'Cap and trade design principle for Canada'

CAN (2009), "Fair Deal = Just transition", <ECO> (3, Oct.)

CLC (1999), "Policy on Just Transition For Workers During Environmental Change"

CLC (2003), "Background Paper on Green Jobs Creation Project"

Economics for Equity and Environment (2009), "The Economics of 350: The Benefits and Costs of Climate Stabilization"

ETF(2008), 'TRADE UNION VISION ON SUSTAINABLE TRANSPORT'

ETUC et al. (2007), "Climate Change and employment: Impact on 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25 of climate change and CO2 emission reduction measures by 2030"

Geels, F. W. (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33(6-7): 897-920.

Global Unions (2002), "Fashioning A New Deal: Workers and Trade Unions at the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an New Deal Group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the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Green4sure (2007), “A Green Energy Plan“, CE Delft

ILO (2008), “Green Job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UC (2008), “Trade Unions and Climate change: Equity, justice &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Trade union statement to COP14, UNFCCC, Poznan, Poland, 1-12 Dec. 2008).

ITUC (2009a), “Trade Union Priorities for the Negotiating Tex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July/August 2009

ITUC (2009b), “Trade unions and climate change: Equity, justice &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Trade Union Statement to COP15, UNFCCC, Copenhagen, Denmark, 7-18 December, 2009).

ITUC · ETUC · TUAC (2006), “Trade Union Climate Change Strategies: The trade union statement to COP12/MOP2’(UNFCC, Nairobi, Kenya, 6-17 Nov. 2006)

ITUC · ETUC · TUAC (2007), “Trade Union Recommendation to COP13” (UNFCCC, Bali, Indonessia, 3-14, Dec. 2007)

McKinsey & Company, “Pathways to a Low-Carbon Economy“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뉴스레터 182호, 2009. 5)

OECD (2004), “ENVIRONMENT AND EMPLOYMENT: AN ASSESSMENT“

OECD (2009), “Climate Change,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 Conceptual Framework“, CFE/LEED

Penny, Jennifer L. (2000), “Green Jobs: Labour-Environmental Collaboration in Australia and Denmark“, Dissertation for Ph. D(Uni. of Massachusetts Lowell)

Peter Poschen (2007), “Green jobs: Facing up to ’an inconvenient truth’“, World of Work (ILO, Aug, 2007)

Pollin, R., H. Garrett-Peltier, J. Heintz and H. Scharber (2008), “Green Recovery: A Program to Create Good Jobs and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PERI,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RMT(2008), ‘Who say there is no alternative?’

Robert W. Gordon(2004), *Environmental blues: Working-class environmentalism and the labor-environmental alliance, 1968-1985*, Ph D.'s thesis of Wayne state Univ.

Rosemberg, Annabella (2009),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vement's Response",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심포지엄 발표문 (2009, 8)

TUC(2007a), 'Can unions save the planet?', Workplace Report February 2007

TUC*2007b), 'Unions seek more green involvement', Labour Research June 20071

Schneider, Werner (2006), "Alliance for Work and Environment", Trade Union Assembly on Labour and Environment (2006. 1. 15-17, 케냐 나이로비) 발표문

Sustainlabor · UNEP (2008), "Climate Change, its Consequences on Employment and Trade Union Action: a training manual for workers and trade unions"

UN ESCAP (2006), "Green Growth at a Glance" (http://www.unescap.org/esd/water)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EP(2006), "Final resolution of the Trade Union Assembly at its first meeting" (Trade Union Assembly on Labour and the Environment First meeting, Nairobi, 15.17 January 2006)

UNEP(2009), "Global Green New Deal"

UNEP(2008), *Green Jobs: Toward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UNEP · WHO · ILO (2007), *Labour and Environment: A Natural Synergy.*

WRI (2005), "Navigating the Numbers: Greenhouse Gas Data and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WWF (2009), "Low Carbon Jobs for Future"

Bill, Anthea., Mitchell, William. and Welters, Riccardo(2008), *Policy Report : A Just Transition to a Renewable Energy Economy in the Hunter Region, Australia*, Centre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CofFEE)

ILO green Jobs initiative site
http://www.ilo.org/integration/themes/greenjobs/lang--en/index.htm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2005), “일자리 창출! 기후 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성과와 전망”,『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05. 6. 22. 국회 헌정기념관)

고르, 앙드레 (2008),『에콜로지카』, 생각의나무

국가에너지위원회 (2008),「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국회입법조사처 (2009),『역대정부 일자리 창출 예산, 정책 실적의 조사 분석』

김승래 (2009),「외국의 탄소세 도입현황과 국내 적용의 타당성」, 제2회 기후행동세미나 발표문 (기후변화행동센터, 2009. 9. 22)

김승택 (2008),「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녹색성장과 국가성장전략의 모색”, KDI・미래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세미나(KDI, 2008. 11. 13)

김승택 (2008),「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KDI 토론회 발표문

김승택 (2009),「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녹색일자리의 이해, 일자리 창출 및 정책과제」,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자료집 (2009. 7. 14)

김재현 (2006),「자연자원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환경・고용・복지 문제의 통합 접근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자료집 (환경정의, 2006. 3. 22)

김준순 등 (2002),「육상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사회연구소 (2009),『한국환경보고서 2009」

녹색성장위원회 (2009a),「국가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2009b),「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대한상공회의소, (2009),「국가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
박진희・한재각・김현우・이진우 (2009),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 분석”,「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창립심포지엄 자료집」(2009. 8. 27, 홍사단 강당)
발전노조 (2008),『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과제』
벵제르, 장 뤽 (2007),『에너지 전쟁』, 소나무
비반코 무가라 (2008), “ITUC의 기후변화 및 친환경 일자리 관련 국제 정책”,『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노동운동의 역할" 국제세미나 발표자료』(한국노총, 2008. 5. 19).
삼성경제연구소 (2009)「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서울경제 (2008), “환경예산 증가율 7년간 연평균 3.2%에 그쳐” (2008. 1. 31)
셰어, 헤르만 (2006),『에너지 주권』, 고즈윈
에너지경제신문(2009),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기업 선호도 조사”(2009. 9. 9)
에너지관리공단 (2007),「에너지 국제비교」, (http://www.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2005),「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 대책」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기후변화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 기후정책통합과 국무총리실의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이성남 의원실
에너지정치센터(2009),『기후변화와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교통분야・물류 부문을 중심으로』, 운수노조・운수노동정책연구소
에코아이 (2009),「환경친화기업협의회 기후변화대응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 방안 제안」
윤순진 (2006), “에너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환경・고용・복지 문제의 통합 접근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자료집」(환경정의, 2006. 3. 22)
윤순진 (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ECO」, 제 13권 1호
윤순진 (2009),「저탄소 녹색성장패러다임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탄소감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이병욱 (2009),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책의 과제”,「에너지시민회의 토론회 자료집」(2009. 6. 16)
이상훈 (2009),「노동과 환경의 연대 사례와 노동조합에 대한 제언」, 2009 한

국사회포럼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발제문
이유진 (2009), 2009 한국사회포럼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토론문
이정호 (2009), 「환경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조 개입전략의 전제」, 2009 한국사회포럼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 발제문
이진우 (2009a),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쟁점과 전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진포커스> 창간준비 9호
이진우 (2009b),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쟁점과 전망Ⅱ」,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진포커스> 4호
이헌석 (2008), “환상을 넘어 현실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만남, 그 확장을 위한 제언”, 「제1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 자료집」(2008. 8. 22-23, 강화도)
이진우 (2009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의 제언”
이진우 (2009c),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개요 및 시사점」 (2009. 9)
이필렬 (2005),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과 환경 공동의 과제」,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 발표문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과제」
정지원・박수경,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 경제>, Vol.9, No.35 (2009. 11. 4.)
조보영・한재각(2009),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영향 및 대응”, 「에너진 포커스」, 제5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식경제부 (2009), 「세부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 (지식경제부 국회 제출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2009), 「2008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분석보고서: 산업부문(광업・제조업)」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녹색특위 (2009),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녹색특위 (2009),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 검토 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 「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경제적 파급 및 고용 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

프리드먼, 토머스 (2008),『코드 그린』, 21세기북스
한국노동연구원 (2008),「녹색성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2008),「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하여」(2008년 1월)
한기주・임동순, (2009),「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한재각 (2008a),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매개로 한 적록연대의 가능성',『노동과 사회」(137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재각 (2008b), '광우병 위험, 노동운동 힘을 보여줘',『레디앙」(2008. 5. 13)
한재각 (2009),「고용・기후 양대 위기와 녹색일자리 전환 전략의 모색」,『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전환전략의 모색 토론회 자료집』(2009. 7. 14)
현대경제연구원 (2008),「기후경제학의 대두와 대응 전략」(VIP REPORT, 2008. 1. 24)
홍금우・이민희 (2008), "기후변화협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한국비지니스리뷰」, 제1권 제2호 (2008. 12)
환경부 (2006),「COP 10 보고 및 대응 방안 보고」(2006. 1)
환경정의 (2006a),『환경・고용・복지 문제의 통합 접근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론회 자료집』(2009. 3. 22)
환경정의 (2006b),「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보고서」
황태연 (1995),『환경이론의 정치경제학적 구성』, 나남
허철행 (2008), "국내노조와 시민사회의 연대 사례: 서울지하철노조와 환경운동연합의 석면 문제 공동대응을 중심",「제1회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 자료집」(2008. 8. 22-23, 강화도)